

# 2017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

(주요정책부문)

2018. 1

국토교통부

# 1. 평가개요

## (1) 중점 평가방향

### □ 부서간 칸막이 없는 협력을 통해 수행하는 협업과제 지속 추진

- 평창올림픽 지원, 주차장 문제 해소 등 단일 부서의 역량·정책수단 만으론 달성이 어렵거나 협력시 효율적 수행이 가능한 정책목표 상존

☞ 목표가 동일한 부서별 과제를 협업과제로 관리하여 부서간 인력과 정책정보 등의 공유를 통해 행정의 효율성과 정책효과 제고

### □ 계획이행의 충실성 및 성과목표 달성도 원점수로 변경

- 정량적으로 산정되는 계획이행의 충실성과 성과목표 달성도가 표준화 평가됨에 따라 적극적 노력 여부에 대한 정확한 평가에 애로

\* 표준화( $\frac{X(\text{과제별 원점수}) - \text{소위별 평균}}{\text{소위별 표준편차}}$ ) 시 소위별 평균·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점수를 산정하나 소위별 차이가 없는 정량적 지표의 경우 원점수를 활용하는 것이 합리적

☞ 충실성과 달성도 점수를 원점수로 반영하고, 평가지표 수준의 객관적인 관리를 위해 자료출처를 명시하고 감사관실과 중복 검증

### □ 평가의 대응성 및 투명성 강화

-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창출을 유도하기 위해 CEO과제에 대해서는 정책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평가에 반영(5점)

- 투명하고, 공정한 성과평가 운영을 위해 평가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, 국회 상임위에도 보고

### □ 과제내용 중심의 난이도 평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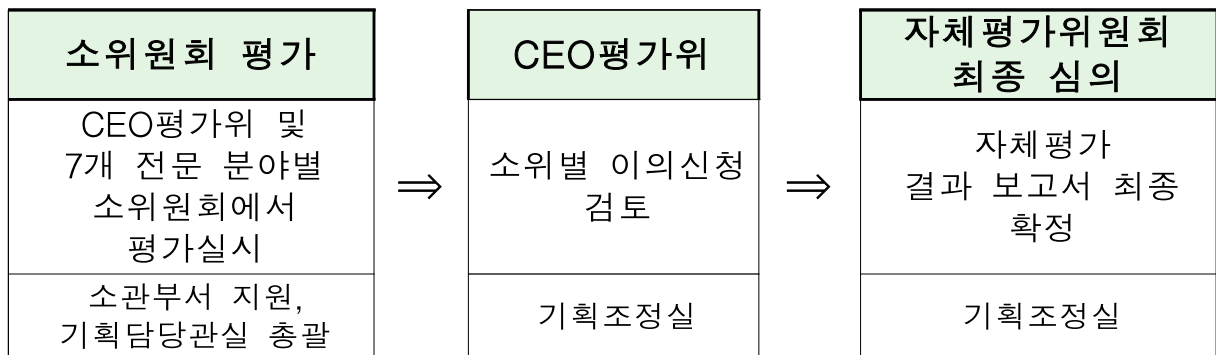
- 과제의 유형보다는 실질적인 과업내용에 따라 난이도 평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과제 유형별 난이도 등급 배분 조정

\* CEO과제 난이도 S등급 비중 감축 / 실국장과제 S등급 비중 확대

## (2) 평가추진 개요

### □ 평가추진 체계

-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 및 국토교통부 자체평가위원회 규정에 따라 위원회 구성·운영
  - 국토, 주택, 건설·수자원, 교통, 도로·철도, 항공 등 전문 분야별로 7개의 소위원회(소위별 3~5명 위원 구성)를 구성·운영
  - 소위원장들로 구성된 CEO평가위원회를 별도 구성, CEO과제를 소위와 별도로 통합평가하고 소위별 이의신청을 최종 조정



### □ 평가방법

- 자체평가위원회를 통해 주기적인 평가 실시
  - 난이도 평가('17.10)→과제이행 노력도 및 과제목표 달성도 평가('18.1)
- CEO평가위에서 먼저 CEO·협업과제를 평가(CEO 25개, 협업 10개)한 후 각 소위별로 실국장과제를 평가
- 평가 종료 후에는 과제담당부서의 이의신청을 받아서 CEO평가위에서 최종적으로 조정
- 자평위 전체회의에서 최종평가결과를 심의하여 최종 확정

□ 평가대상 및 평가지표

○ 평가대상 : 총 100개 과제

○ 평가지표

평가항목	평가지표	측정방법(측정기준)	배점 (100)	평가 시기	
과제 난이도	○ 성과지표의 난이도	·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 · 이해관계자간 의견 대립정도 · 과제내용의 신규추진여부 (법 제정 등)	30	'17.10	
과제이행 노력도	○ 계획이행의 충실성	· 계획의 기한내 완료여부	20		
	○ 행정여건 및 상황 변화에 대한 대응성	· 정책현장 의견수렴의 충실성 · 여건·상황변화에 대응정도 · 적극대응으로 문제해결 여부	15	35	
과제목표 달성도	○ 성과지표의 달성도	· 성과관리시행계획에 제시된 성과지표의 목표치 달성도	20	'18.1	
	○ 정책효과 발생정도 (CEO·협업과제는 10점)	· 계획수립시 예상한 정책효과 발생여부 · 성과에 대한 여론 반응정도	15 (10)		35
	○ 정책만족도 (CEO·협업과제)	· CEO·협업 과제에 대한 대국민 정책 만족도 및 인지도 정도	(5)		

<가감점 평가항목 및 배점>

평가항목	가점 항목
정책 우수과제 (최대 2점)	○ 주요업무 평가에서 우수과제, 핵심관리과제로 선정된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가점부여 - 정책우수과제(최대 2점), 핵심관리과제(최대 2점) - 그룹핑된 과제는 개별과제의 비중대로 가점배분
국정과제, 업무계획 등 반영정도 (최대 -2점)	○ 국정과제 및 업무계획에 포함된 내용이 시행계획에 반영 되지 아니한 경우 → 해당과의 관련 과제에 감점(-2점) ○ 시행계획에는 반영했으나, 당초 보고된 내용보다 목표치를 하향 조치한 경우 → 해당과제에 감점(-1점)

## 2. 평가결과

### (1) 총 평

□ 총 107개 평가 대상 부서의 100개 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,

- 매우우수 5개(5%), 우수 15개(15%), 다소 우수 15개(15%), 보통 30개(30%), 다소 미흡 15개(15%), 미흡 15개(15%), 부진 5개(5%)

구 분	2015년도	2016년도	2017년도
관련 부서 수(BSC 단위부서)	본부 100개	본부 100개	본부 107개
과제 개수	203개	201개	100개
지표 개수	360개	341개	356개
성과지표 목표치 평균 달성률	90% (37개 지표 미달성)	90% (33개 지표 미달성)	95% (16개 지표 미달성)
평균 점수(과제)	88.25	88.89	92.41
최대값-최소값(과제)	20.88	18.32	14.72
표준편차	4.01	3.43	3.08

- 매우우수 과제는 인천국제공항 인프라 확충, 출퇴근 교통편의 제고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, 지역거점 활성화(행복도시·새만금),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, 평창올림픽 지원 등으로 평가됨
- 부진 과제는 공간정보 인프라 혁신, 지적확정측량시장 민간이양을 위한 제도개선 등으로 평가됨

- 총 100개의 관리과제의 356개 성과지표에 대한 목표달성도 분석 결과, 성과지표 목표치에 대한 평균 달성률은 95%로
  - 340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충실히 달성하였으나, 16개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달성하지 못함
    - \* 다만, 법령 개정 목표인 경우 법안 국회제출 실적 등 지표의 부분 달성에 대해서는 달성 비율에 따라 등급화하여 산정(50~90%)
- 금년도 성과평가 체계 개편의 핵심은 성과 중심의 평가를 위해 달성도의 중요도를 상향하는 것으로,
  - 소위별 평가의 관대화 예방을 위해 난이도, 충실성, 달성도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지표는 표준점수를 활용하여 산정
    - \* 특별히 성과가 우수한 과제는 장차관 평가를 거쳐 반기별로 가점 부여하여 과제 추진의 동기부여(상반기 1점, 하반기 2점)
    - \*\* 현장점검을 통한 평가위원들의 관심도와 이해도 제고

## (2) 주요성과

- 「주거복지로드맵」(17.11)과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(17.12) 마련 등 주거복지를 최우선 정책목표로 삼고, 서민 주거안정에 총력
  - 공급자 중심의 주택지원에서 벗어나, 청년·신혼·고령·취약계층 등 생애단계·소득수준별 맞춤형 주거지원 방안 마련
    - \*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 65만호, 공공지원 20만호, 공공분양 15만호 등 공적 주택 100만호 공급계획 마련('18~'22)
  - 세제·건보료 혜택을 통한 임대등록 활성화, 정보 인프라 구축 및 임차인 보호강화\* 등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·안정성 강화
    - \* 계약갱신거절기간 단축,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범위 확대, 전세금반환보증 활성화
- 「8.2 주택시장 안정화방안」과 「10.24 가계부채대책」을 통해 투기수요 유입을 차단하고,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형성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

- 8.2 대책 후 전국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서울을 제외한 대책 전 과열을 보였던 수도권·부산·세종 등도 진정

\* '17.7월5주 → 12월4주 주택가격 상승률(%)

(전국) 0.10 → 0.01, (수도권) 0.19 → 0.07 (부산) 0.10 → △0.04, (세종) 0.27 → 0.00

- 출·퇴근 시간 단축 효과가 큰 수도권 급행열차를 도입\*(17.7)하고, 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(파주~삼성) 기본계획을 확정(17.12)

\* 경인선·경의선·수인선·안산선 4개 노선(노선별 6~20분 단축 효과)

- 출·퇴근 전용 M-버스 도입, 광역버스 노선 확대 등 버스운행을 확충하고, 수원역·오산역 환승센터 개통 등 대중교통 이용편의 개선

- 공공매립 주도를 위한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방안 마련, 혁신도시 지역 인재 채용비율 확대\*(17.10, 現 13.3% → '22, 30%) 등 지역육성 전략 구체화

- 도시재생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지원, 민·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첫 뉴딜 시범사업 대상 68곳 선정(17.12)

- (스마트시티) 스마트도시법 시행(17.9), 범부처 추진체계 구축, 국가전략 R&D 사업 선정 등 스마트시티 조성·확산 기반 마련

- 통합 플랫폼\* 표준 및 인증체계 마련(17.11), 도시재생과 연계한 스마트시티형 시범사업 지구 선정(5곳) 등 실증사업 본격 추진

\* 지자체 스마트시티 센터에서 방법·방재·교통·시설물 등 정보시스템을 연계·활용하기 위한 SW

- (자율차) 기술개발 촉진을 위해 'K-City'\* 착공(17.8) 후 일부구간을 우선 개방하고 규제개선을 통해 임시운행허가를 확대('16, 11대 → '17, 30대)

\* 32만m<sup>2</sup> 규모로 자동차안전연구원(화성)에 구축 중, 고속도로·도심 등 5개 환경 재현

- (드론) 야간·비가시권 비행 특별 승인제도 도입, 전용 비행시험장 조성(17, 3개소 설계) 등을 통해 상업용 드론시장 성장세 확대\*

\* ('16→'17.11) 장치신고: 2,172 → 3,735대, 사용사업체: 1,030 → 1,459개, 자격취득: 1,326 → 3,736명

### (3) 개선 · 보완 사항

□ 비상대비, 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,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 확대, 철도차량산업 전략적 육성 등 35개 과제가 미흡으로 평가

○ (자연재해) '16년 경주(5.8규모)·'17년 포항(5.4규모) 등 잇단 지진발생으로 필로티, 소형 건축물 등 시설물 안전에 대한 강화 요구 증대

○ (건설·화재) 범부처 대책 등 안전강화를 위해 노력했으나, 평택대교 붕괴('17.8), 크레인 전도, 화재사고 재발로 현장중심의 점검강화 요구

○ (교통안전) 교통사고 사망자수 감소 추세에도 졸음운전, 위험물 폭발 등으로 인한 대형 교통사고가 지속되어 보다 세밀한 대책 필요

○ 시설확충, 이용객 편의 제고를 위해 김해신공항, 제주 제2공항 등을 건설 추진중이나 주민이견 등으로 사업 지연 우려

\* 부산 강서구, 김해 지역 김해신공항 반대위 구성, 제주 제2공항 반대 범도민 행동 출범 등

○ 취수원 이전 등 수자원의 확보와 배분에 대해 중앙정부, 지자체 및 주민 간 갈등 지속

\* (경남-부산) 창녕 강변여과수 사업에 대해 이견 / (대구-구미) 취수원 이전에 대해 이견

○ 남해 EZZ 골재 채취 중단('17.1~) 이후, 대안을 찾는 과정에서 관계기관, 어민단체 등과 협의중이나 이견 해소에 어려움

○ (건설) 불법 재하도급 등 수직적 갑질문화, 칸막이식 업무영역, 일감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 필요

○ (물류) 운임덤핑, 과적 등 화물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요구, 택배 근로자의 고강도 노동·저임금\* 등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

\* 배송기사 日취급량은 150~250개, 月순수입 240만원(일본과 비교시 약 69% 수준)



#### (4) 평가결과 종합

성과 목표	관리과제	평가등급
<b>I. 더불어 잘사는 국토공간을 구현한다.</b>		
<b>1. 자립과 상생의 국토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한다.</b>		
	① 지역거점 사업(행복도시, 새만금) 활성화	매우 우수
	②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도입	보통
	③ 국토종합계획 수립 등을 위한 국토정책방향 재정립	다소 우수
	④ 미래 수도권 경쟁력 강화기반 조성	보통
	⑤ 지역의 고른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정책 2.0 추진	보통
	⑥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발전 역할 확대	미흡
<b>2. 쇠퇴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.</b>		
	①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발굴·지원	다소 우수
	②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하는 新산업입지 공간 확보	보통
	③ 지역밀착형 도시재생사업 활성화	보통
	④ 발전거점 조성 지역계획 수립	다소 미흡
	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토개발	우수
<b>3. 안전한 국토를 조성한다.</b>		
	① 비상대비·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	미흡
	② 건축물 안전관리 상시화	다소 우수

성과 목표	관리과제	평가등급
	③ 건설현장 및 지하안전관리 제도기반 구축	다소 미흡
	④ 극한재난에 대비한 수자원시설의 안정성 강화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한 스마트 물관리	미흡
	⑤ 부처 공동으로 특정도시하천의 침수예방대책 추진	보통
	⑥ 환경생태와 조화되는 머물고 싶은 수변공간 조성	다소 우수
<b>4. 지속가능하고 품격 있는 생활공간을 실현한다.</b>		
	① 제로에너지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	다소 우수
	② 빗물활용 및 저영향 개발을 통한 물순환 활성화	보통
	③ 항공기 바이오연료 시범운영 등 저탄소 항공 실현	미흡
	④ 녹색인프라 관리정책 합리화	보통
	⑤ 국토경관 향상	보통
	⑥ 참여 거버넌스에 기반한 내실 있는 용산공원 조성 추진	보통
	⑦ 공항주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	다소 미흡
<b>5. 한반도의 통일·화합시대를 선제적 준비한다.</b>		
	① 유라시아 新물류루트 개척 등 물류기업 해외진출 촉진 (경원선 복원사업, 대륙횡단철도 연계 등)	다소 우수
<b>II.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 관리한다.</b>		
<b>1.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·관리 제도를 개선한다.</b>		
	①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	매우 우수

성과 목표	관리과제	평가등급
	② 신혼부부임대주택 20만호 공급기반 마련	다소 미흡
	③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반 마련	보통
	④ 세어형 청년 공공임대주택 공급기반 마련	다소 미흡
<b>2.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을 추진한다.</b>		
	① 맞춤형 주거 지원 강화 및 공공지원주택 공급기반 마련	다소 우수
	② 주거불편 제로화 및 미래형 주택 시범사업 추진	보통
	③ 정비사업 투명성 및 안전성 제고	다소 우수
<b>3.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.</b>		
	①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	다소 우수
	②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금융·청약제도 개편	우수
<b>Ⅲ.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.</b>		
<b>1.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.</b>		
	① 출·퇴근 교통편의 제고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	매우 우수
	② 수도권 전철 급행화 등 철도서비스 품질 제고	다소 미흡
	③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 광역급행철도망 구축	우수
	④ 교통혼잡 개선 등 수요자 중심의 도로투자 확대	부진
<b>2. 국가기간 교통망의 공공성을 강화한다.</b>		
	① 인천국제공항 허브공고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	매우 우수

성과 목표	관리과제	평가등급
	② 철도 공공성 강화 및 철도산업 육성을 통한 경쟁력 있는 철도 구현	우수
	③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 및 민자도로 관리 강화	우수
	④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 지원	우수
	⑤ 출퇴근시간 단축, 벽지노선 운영 등 철도서비스 공공성 제고	다소 우수
	⑥ 친환경차(전기, 수소차) 충전인프라 구축 및 도로공간 이용 효율화	보통
	⑦ 국토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공항 건설	우수
<b>3. 교통비를 절감하고 교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.</b>		
	① 수요자 중심의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	보통
	② 도심 내 대중교통 시설 확충	보통
	③ 대중교통 취약지역 이동권 강화 및 택시산업 선진화	다소 미흡
	④ 안성-성남 스마트 하이웨이 '17년 착공	다소 미흡
	⑤ 인프라 개선을 통한 고속철도 및 기존선 고속화 기반 마련	부진
	⑥ 전략적 국제항공네트워크 확대 등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	다소 미흡
	⑦ 공항이용 편의성 개선을 위한 '원스톱 보안' 확대	다소 미흡
<b>4.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.</b>		
	① 철도인프라 안전관리 고도화	보통
	② 빅데이터 기반의 예방형 항공안전관리	보통

성과 목표	관리과제	평가등급
	③ 교통사고 사망자 수 3,000대로 감축	우수
	④ 편리하고 안전한 주차장 이용을 위한 기반 조성	매우 우수
	⑤ 안전한 국민 교통환경 조성을 위한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	다소 미흡
	⑥ 사고·장애 예방 스마트 안전관리체계 마련	보통
	⑦ 철도차량산업의 전략적 육성	다소 미흡
	⑧ 항공사 안전관리기능 강화로 세계 최고의 안전도 달성	미흡
	⑨ 2030 미래 글로벌 항공교통관리체계 구현	미흡
<b>IV.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을 육성한다.</b>		
<b>1.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.</b>		
	① 수자원산업 지원체계 구축	다소 미흡
	② 부동산 종합서비스산업 발전기반 구축	다소 우수
	③ 공공리츠 다양화 및 공모상장 활성화	우수
	④ 감정평가 산업 경쟁력 강화	미흡
	⑤ 스마트한 택지 관리	다소 미흡
	⑥ 신산업 육성 등 항공산업 경쟁력 제고	보통
	⑦ 민군겸용 헬기 국산화 국책사업 지원	미흡
	⑧ 지적확정측량시장 민간이양을 위한 제도개선	부진
	⑨ 지적재조사 효율화를 위한 추진체계 개선	미흡
<b>2. 생활공간 속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한다.</b>		
	① 국토교통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 전략 수립·추진	보통

성과 목표	관리과제	평가등급
	② 스마트시티 국내외 경쟁력 강화	우수
	③ 무인자율주행셔틀 시험운행 등 상용화 지원	보통
	④ 드론 산업의 경쟁력 강화	우수
	⑤ 공공수요 창출 및 운영환경 개선을 통한 드론 산업 활성화	다소 우수
	⑥ 자율주행 등 스마트 도로 서비스 확대 및 민간의 기술 개발 지원	보통
	⑦ 스마트공항 도입 및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통한 공항운영 선진화	우수
	⑧ 제4차 산업혁명 대비 국토교통 빅데이터 인프라 혁신	미흡
<b>3. 신산업의 핵심기반인 공간정보를 고도화한다.</b>		
	① 공간정보 인프라 혁신	부진
	② 공간 빅데이터를 활용한 정책분석 지원	보통
	③ 공간정보 융복합 서비스산업 창업지원	부진
	④ 클라우드 기반 공간정보 융·복합 생태계 조성	보통
	⑤ 항공위성(SBAS)을 활용한 국가정밀위치정보서비스 체계 구축	미흡
<b>V. 국토교통 산업의 상생·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.</b>		
<b>1. 건설산업 문화를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.</b>		
	① 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	우수
	② 스마트 건설기술 개발 및 인프라 노후화 대비	보통
	③ 골재수급 안정화 및 골재원 다변화	미흡

성과 목표	관리과제	평가등급
	④ 전략적 해외 인프라 시장 진출기반 마련	다소 우수
	⑤ 글로벌 인프라 협력 강화 및 국가별 맞춤형 진출 확대	다소 우수
	⑥ 건설 Eng 종합심사낙찰제 도입 등 기술력 강화	보통
<b>2. 물류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한다.</b>		
	① 화물운송시장 신산업육성 및 동반성장 기반조성	우수
	② 신성장 물류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고부가가치화	보통
	③ 물류시설 첨단화 및 거점 물류시설의 운영 효율화	미흡
<b>3.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중심 국토교통행정을 구현한다.</b>		
	①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	다소 우수
	② 토지수용 대상 사업의 합리적 조정(협업)	보통
	③ ‘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체계 도입’에 따른 우리 부 지리정보 분야 국가표준(KS) 운영 체계 정립	미흡
	④ 정책품질 제고를 위한 쌍방향 정책소통 강화	다소 미흡
	⑤ 청렴하고 신뢰받는 조직문화 조성	미흡
	⑥ 국회 법률심사 및 입법과정 대응 효율화	보통
	⑦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한 경제활력 및 신성장동력 확충	보통
	⑧ 자동차 사용자 보호 강화	우수

### 3.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및 조치계획 (관리과제별로 작성)

【전략목표 I】 더불어 잘사는 국토공간을 구현한다.

◆ 성과목표 1. 자립과 상생의 국토균형발전 체계를 확립한다.

1

지역거점 사업(행복도시, 새만금) 활성화

매우 우수

#### (1) 평가결과

##### □ 주요성과

- (새만금) 공공주도 매립방안으로 “새만금개발공사” 신설을 확정하고, 민간투자를 저해하는 규제를 개선하는 등 속도감 있는 새만금 개발을 위한 기반을 획기적으로 구축
  - 부처간 협의결과를 반영하여 “새만금개발공사” 설립을 위한 「새만금특별법」 개정안 발의(조정식 국토위 위원장 대표발의, 11.10)
  - 국가산단 전환 허용, 국공유지 임대료 감면 등 새만금만의 차별적인 특례를 부여하여 민간투자 유도(새만금특별법 김관영의원 발의, 12.22)
- (행복도시)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기능 수행을 위한 토대 마련 및 도시 자족기능 확충 및 장기 발전방향 기반 구축
  - 제로에너지타운 지구단위계획 수립 착수(7.20) 및 산학연클러스터 지원센터를 착공(3.10)하여 첨단산업유치 기반 마련

##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새만금)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을 위해 조속한 공사설립 필요
- (행복도시) 중앙부처 추가이전 등 국정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,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신성장동력 및 자족기능 확충 필요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정책 토론회,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정책 보완, 관계부처와 국회 대응을 통해 법안 통과 완료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새만금개발공사 신설을 통해 새만금 개발에 선순환 구조를 구축, 행복도시 중앙행정기관 추가이전 및 자족기능 확충 기반 마련
3-3. 정책만족도		4.38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지자체, 이전 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자, 토론회, 노사정위원회(청년 고용협의회), 전문가, 지방대 등 의견수렴 : '17.6~9월
  - \* 지자체 (7.11), 공공기관 (6~7월, 6회), 전문가 간담회(2회), 지방대 협의(8.23) 등
- 국토부, 교육부, 기재부 등 관계기관 협의, 전문기관 용역(서울행정학회)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 마련 : '17.7~9월
- 「지역인재 채용 의무화방안」 국무회의(제41회) 부처보고 : 9.19
  - \*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배포 “혁신도시 등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”
- 『혁신도시건설에 관한 특별법』 개정·공포 : 10.24
  - \* 상임위 상정(9.15)→ 법안소위(9.19)→ 상임위 의결(9.21)→ 법사위(9.28)→ 본회의(9.29)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이전 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시행에 혼선이 없도록 국토부 고시 등을 통해 세부시행방안 안내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이전 공공기관, 지자체, 인사 전문가 회의 등을 통한 공감대 형성으로 관련 법률 도입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채용목표제 도입에 따른 지자체 및 학회 관심과 활동 증가
3-3. 정책만족도		4.38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국토종합계획 위상정립, 미래국토상 도출, 정책방향 설정 등을 심층논의하기 위해 **각계 전문가 참여하는 포럼**을 구성·운영
  - 총 9회 개최, 年 인원 100여 명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미래 정책방향 마련을 위한 정책과제 도출 및 토론 실시
- 인구감소, 분권화, 환경성 강화, 안전한 국토 등 국가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핵심이슈에 대한 **미래 정책방향 설정**(12월, 장관보고)
  - 국토정책위원회 보고('17.9), 전문가·국민 설문조사('17.12), 지자체 설명회('17.12) 등을 통해 정책방향 검증
- ☞ 기존 국토계획의 환경성과 환경계획의 공간성을 보완하여 국토 계획과 환경계획의 상호반영이 가능한 체계를 마련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'18년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전문가, 일반국민 외에 지자체, 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체계 구축 필요
  - ☞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단계부터 중앙정부·지자체·전문가 공동 연구단 구성, 시민참여단 운영 등 대국민 의견수렴 체계 구축
- 국토-환경계획 공동훈령(안) 마련시 학계, 연구원 등 전문가 외에 국토-환경계획 수립 주체인 지자체에 대한 의견수렴이 다소 부족
  - ☞ '18년 훈령 제정시 국토부-환경부 합동 간담회, 행정예고 등을 통해 지자체, 일반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추진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전문가포럼, 국민, 지자체 의견수렴 등 적정 수준의 의견수렴, 인구감소·국토안전 등을 종합계획의 핵심 이슈로 설정하여 현안에 적절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5차 국토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 방향성 제시로 미래여건 변화에 대비하고 사회적 혼란 최소화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수도권 인구·산업·토지개발 등 주요 정책 대상별 현황분석 및 기존 제도의 실효성 분석을 통해 새로운 수도권 정책의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'18~'19년도 연차별 세부 추진 계획 마련
- 일본·미국·유럽 등 세계 주요 대도시권과 수도권의 경쟁력 실태 평가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평가지표 개발
- 수도권정비계획 시행령 개정 완료를 통해 도시 경쟁력 제고 및 삶의 질 확충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
  - 직장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복지 확충 등을 위해 있도록 직장어린이집에 대해 과밀부담금을 감면
    - \* 영유아 30명 수용 직장어린이집의 경우 약 2천3백만원의 과밀부담금 감면
  -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해제된 지역을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 권역으로 조정하여 기업세금 증가 등 피해 구제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수도권의 과학적 관리를 위하여 수도권내 인구·공장·주택 등 주요 정책 현황을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구축 필요
  - 주요 대도시권 경쟁력 평가도 주기적인 평가체계를 마련하여 변화양상을 추적하여 수도권 정책에 대한 유의미한 시사점으로 활용
- 제4차 수도권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을 마련 과정에서 제기된 수도권 관련 제도의 문제점을 심화 연구하여 개선사항 발굴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산·학·관 설문조사, 전문가 자문회의(6~11월), 지자체 협의 등 지속적 의견수렴,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자체 설득 및 정책방향 전환 등 적극 대응 우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수도권 정책 기본방향 전환, 과밀부담금 감면 등 경제적 부담 감소 효과 제고 등수도권 경쟁력 강화에 기여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(지역 주도) 지역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지역발전특별회계 개편 및 중앙-지방 간 협약제도 추진방안 마련('17.12)
- (미래여건 대응방안) 인구감소 및 저성장에 대응하는 효율적인 공간정책과 자립적 지역발전을 위한 전략\* 및 기반 마련('17.12월)
- (지역사업 품격제고) 지역개발사업 디자인 관리체계 도입 등 품격 제고방안 마련('17.12월), 가야문화권 발전구상안 수립('17.12월)
- (평가체계) 평가계획 수립('17.2월) 후 지자체 간담회('17.5월), 기반시설 타당성 평가완료('17.12월), 신규 지역개발계획 실현가능성검증완료(5개 도 '17.11), 집행평가 등 최종 평가 완료('17.12월)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'17년 평가를 완료하였으나, 평가의 완결성·실효성 제고를 위해서는 평가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보완 필요사항 검토필요
  - (사전평가) 실현가능성 검증의 경우 변화된 검증 체계(단계별 검증 시스템)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평가지표의 적절한 조정이 요구됨
  - (집행평가) 예산집행 실적에 대한 단순 모니터링이 아닌 집행 부진 사유에 대한 면밀한 검토, 현장점검 및 컨설팅 등 사업관리 강화방안 요구
  - (사후평가) 지역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 파급효과(지역의 경쟁력 또는 삶의 질 향상 등)을 파악할 수 있는 사후평가체계 필요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간담회, 포럼, 설명회, 설문조사 등 소통활동 추진, 지자체 신청사업에 대해 철저한 검증으로 낭비요소 제거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지역의 참여를 확대하는 제도개선을 통해 지역 주도의 지역사업 추진, 자생적 발전기반 구축으로 자율적 성장 견인 기대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혁신도시법을 개정하여 이전공공기관에 대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·시행하도록 의무화
  - 지역산업 발전 지원, 지역인재 육성 및 채용, 주민 생활 지원 및 기타 혁신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등 계획에 포함할 항목도 구체화
-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대학과 협력하여 지역대학생 등이 참여하는 오픈캠퍼스 운영
  - 이전기관 직무 및 현장 견학 중심의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이전기관에 대한 이해도 제고 및 젊은 층의 지역 정착 유도
  - \* 광주·전남 혁신도시로 이전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전력거래소 등에서 지역대학생 대상 교육과정 운영
- 이전공공기관에 대한 정부평가 시 지역발전사업 참여 실적을 평가 항목에 강화하여 반영하는 방안 협의
  - 사회적 책임 부분에 대한 공공기관 평가지표 배점을 상향 조정하고, 세부평가 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사업 참여 실적에 가중치 부여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발전을 위한 지역발전 사업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인적·물적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
  - 이전공공기관의 지역발전계획 수립·시행에 필요한 조직 및 예산이 반영될 경우 이전기관의 실질적인 지역발전 견인효과 기대 가능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10개 시도 및 이전공고이관 관계자 회의 등을 통해 지역발전참여 활성화 방안 및 오픈캠퍼스 추진방안 논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지역발전참여 확대방안 마련, 오픈캠퍼스 운영 등으로 이전기관의 지역발전 활성화와 지역학생들의 진로탐색 기획 확대 효과

◆ 성과목표 2. 쇠퇴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국토공간을 체계적으로 활용한다.

1 도시재생 뉴딜 신규사업 발굴·지원

다소 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도시재생 뉴딜 추진방안) 도시재생 뉴딜의 추진 배경, 추진 방향, 주요 과제를 내용으로 「추진방안」을 마련하고, 특위에서 의결
  - 사업 첫해에는 지역별 우수사례 발굴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하고, '18년부터 우수사례 확산 및 본격적인 뉴딜사업 착수
  - 연도별 재생 수요조사, 사업 준비정도 등을 감안하여 매년 90~100곳 내외 사업을 선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
  - 중앙과 지방이 협업하여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·선정하고 이를 확산시키는데 초점 (사업 선정권한을 점진적으로 지자체 위임)
- ('17년 뉴딜 시범사업 선정) 부동산시장 안정을 전제로 우수 사례를 발굴·확산시키기 위한 시범사업으로 68곳 선정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부동산 시장 안정을 고려하기 위한 제도보완 방안과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대응방안도 구체화시킬 필요
  - ☞ 지자체 사업계획 수립시, 투기방지 및 부동산 관리대책을 포함토록 하고,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사업 추진과정에서 투기가 우려될 경우, 사업을 지연시키거나 취소하는 방안 검토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주민·지자체·전문가 등 다양한 의견수렴,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젠트리피케이션 우려에 제기에 투기과열지구 제외 등 적정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전국적으로 69곳의 시범사업 선정계획 확정, 지역주도 방식의 사업추진방식 전환 등 성공적인 시범사업 선정 추진
3-3. 정책만족도		4.54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도시첨단산단) 확대 경장회의('17.12.11)에서 '판교 제2테크노밸리 활성화 방안\*' 발표를 통해 혁신성장의 선도거점 역할 수행

\* 정부의 핵심과제인 혁신성장 추진전략의 일환으로, 혁신성장 정책들을 실제 공간인 판교 2밸리에 구현하여 혁신·창업 선도거점으로 조성

- 판교 2밸리내 창업지원시설인 기업지원허브 준공('17.10)에 맞춰 5개 부처, 11개 입주지원기관\*, 240여개 기업 입주 착수

- (지역특화산단) 개발여건(KDI 예타) 및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계획 여부 등을 거쳐 사업추진 여부 결정 및 산단계획 승인을 추진

- 경남(항공)과 밀양(나노)은 산업단지계획 승인 완료('17.上) 및 사업착수

- 전주(탄소)는 사업계획 조정\* 후 KDI 예타 통과('17.9)하였으며, 사업승인 신청(LH→국토부, '17.12)

\* 사업규모 축소(843→638천㎡), 유치업종 확대(탄소섬유→탄소소재) 등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도시첨단산단) 판교 모델의 지방확산을 위해 적정 입지 분석 및 제도개선 등 필요

- '18년 정책연구용역을 통해 적정 입지 선정, 임대공간 규모, 임대료, 정부지원책 및 제도개선 사항 등 발굴 추진

- (거제 국가산단) 조선업 구조조정에 따른 앵커기업의 참여 및 인근 유희산단 검토 등 좀 더 면밀한 검토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민관합동 TF 및 기업지원허브 TF 운영, 환경단체와 원활한 의사소통 등을 통해 정책현장 적정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판교밸리를 통해 혁신창업 종합지원 체계 구축, 도시첨단 및 지역특화산단 추진으로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기대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국정과제인 도시재생뉴딜사업을 지원·활성화하고, 뉴딜과 관련성 높은 재생사업의 추진력을 높이기 위해 법·제도 개선
  - 구도심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도시재생뉴딜의 정책 방향과 실제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개정수요를 반영하여, 도시재생법이 제정('13.6)된 이후 4년 만에 최초로 개정('17.12)
- 지역·민간 등 참여를 통한 지속가능한 거버넌스 구축 추진
  - 재생정책 및 사업성과 공유 및 주민·전문가·지자체·중앙부처 등 사업 참여주체 간 협업을 위한 대국민 '도시재생한마당' 추진(12.22)
  - 국내외 관계 전문가가 모여 도시재생의 새로운 방향 모색을 위한 '국제 컨퍼런스'를 개최(9.8)하고, 도시재생 정보체계를 고도화하여 지역의 사업추진을 실질 지원할 수 있는 통합플랫폼으로 개편(12월중)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노후주거지 등 일부 쇠퇴유형을 포용하지 못하고, 현장에서 재생사업 추진이 어려운 낮은 실행력 등 한계 존재
  - ☞ 변화된 도시여건과 사업 중심의 뉴딜정책 반영을 위하여 도시 재생법을 실효적인 지원법으로 개선 예정('18년중 개정안 발의)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시도 간담회, 워크숍, 국제컨퍼런스 개최 등 다양한 정책방향 모색을 위한 활동 추진, 관계부처 및 국회 적극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.4	‘예비사회적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침’ 수립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도시재생 뉴딜 추진을 위한 종합적 기반 마련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동력을 부여하고, 재생효과 극대화 및 사업지역 외부로도 연계 · 파급에 기여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내륙·해안·해양 광역관광루트 개발로 내·외국인 관광을 촉진하고, 신규 콘텐츠 지속 개발을 위한 남해안 발전거점 기본구상 수립 ('17.10월)
- 기본구상 내 중점 추진사업을 조기에 발굴하여 구체적 실행계획 마련 추진('17.下)
  - \* 섬진강 문화예술벨트 조성, 해양관광진흥지구 컨설팅 지원 등 9개 연구용역
- 신규 지역발전거점 대상권역을 추가로 선정(문체부 테마여행 10선 사업과 연계)하여 '연계협력형 지역계획 수립' 추진('17.12월)
  - \* 경기, 강원, 충남, 충북, 전남, 전북, 울산+경북 등 7개 신규지역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남해안 발전거점 기본구상 수립 후, 계획의 대상지역을 확대\*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 지자체 의견 수렴 등 필요
  - \* 창원, 고성·사천 등 경남지역 시군과 전남지역 시군
- 실행계획 수립 이후 신규 사업의 추진 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특별법 존속 기한('20년) 연장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5	남해안 발전거점 기본구상 용역 준공 지연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무투회의 안건 상정, 합동 워크숍, 시군간 협력 강화를 위한 현장방문 등 소통활동 추진, 주요 쟁점사항 관련 실국과 적정 조율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부처간 융합협력의 필요성 공감, 시군간 연계협력 공감대 형성 수준으로 구체적인 정책효과 발생에는 이르지 못함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토지이용체계 개선) 여건 변화와 다양한 수요에 대응한 토지이용 체계 확립을 위해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, 「국토계획법」 개정
- (효율적·계획적 토지이용 지원) 다양한 지역 여건과 새로운 산업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적극 개선
  - 용도지역 규제를 배제하고 창의적 공간 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복합용도 지구 신설,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입지 가능한 건축물 범위를 확대
- (지속가능한 도시관리)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, 비시가화 지역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, 강화
  - 해제 후 난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미집행시설 해제 가이드라인(17.6),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 개정(17.9),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의 체계적 개발을 유도하도록 성장관리방안 제도 활용 확대 추진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토지이용체계 개선) 금년 토지이용규제기본법, 국토계획법 개정(17.12월)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적기에 개정(18)하여, 차질 없는 제도 시행을 도모할 필요
- (지속가능한 도시관리) 비시가화지역 내 계획적인 입지를 유도하는 제도 기반 강화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자체 권역별 워크숍 등 다양한 소통활동, 국회와 관계부처 적극 설득·협의 등 대응 우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토지이용체계 개선으로 국민불편 해소 및 토지이용 합리화 기대, 장기미집행 시설 도한 최소화 될 것으로 기대

◆ 성과목표 3. 안전한 국토를 조성한다.

1

비상대비·재난안전 대응체계 강화

미흡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종합상황실 공간 신설, 지휘소 개편, 비상통신망 구축 등 **충무상황실 시스템 개선과 훈련을 통해 비상상황대비 위기대응 역량 강화**
  - 위기관리훈련 KR(Key Resolve)연습 정부대응반 운용(3월), 충무계획 담당자 교육(17.9), 비상대비훈련(을지연습)시 전시와 동일하게 실시반(19개) 통합 운용 등을 통해 전시대비 위기대응역량 제고
- 신규유형 재난대비 방안 및 신속대응체계 마련, 업무연속성 계획 선제적 수립 등을 통해 **국토교통분야 재난안전 체계를 강화**
  -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(17.10) 및 연간 상시훈련(17.3~17.11)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실제 작동 가능한 재난 대응역량 제고
  - U-20 월드컵 대테러상황실(17.6), 평창올림픽 대테러 계획수립(17.9), 테러시설 점검(17.12) 등을 통해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지원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한 제도적 지원 장치 필요
  - 국가동원업무에 대한 중점관리지정업체의 호응유도를 위한 세제 지원 등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범정부적으로 마련할 필요
- 재난업무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신규자의 업무이해도 및 업무연계성 저하 등을 감안하여 **담당자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확대**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재난관리책임기관 컨설팅을 통한 의견청취, 국가중요시설 선제적 점검 실시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중앙부처 재난관리평가 우수기관 안전한국훈련 평가 최우수기관
3-3. 정책만족도		4.56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「고층건축물 화재안전대책」(17.8.3,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)을 수립하고 동 대책에 따라 화재안전성능평가\* 기준 마련 및 평가 착수(17.11~18.下)
  - \* 피난시설, 방화구획, 소방시설 등을 종합 검토하여 개별 건축물의 화재안전성 평가
- 또한, 건축물 단열재의 제조·유통·시공단계에서 발생하는 불법 사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
- (내진개선)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\*, 기존건축물 내진보강시 인센티브 부여(용적률 등) 등 내진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령 개정(17.2월, 10월)
  - \* 3층 또는 연면적 500㎡ 이상 → 2층 또는 연면적 200㎡ 이상, 모든 주택
- 지역건축안전센터 설립·운영 방식에 대한 가이드라인(안)을 마련하고, 시범사업(세종시)을 추진하여 보완 사항\* 도출
  - \* 추후 건축법 시행령 등에 반영할 예정(개정안 마련 및 방침 수립 ~'17.12)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화재안전성능평가에 설계도서 분석 및 현장확인 등을 '18년 하반기 까지 조속히 마무리되기 위해서 평가업무 수행자에 대한 철저한 행정적 지원 필요
  - \* 원활한 평가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 및 관련 자료 등 제공
- 불량자재 제조·유통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자재 제조현장 및 유통 장소 등 점검 대상이 확대·시행(17.2.4.)됨에 따라 관련 단체·협회·기관에 대한 홍보 강화와 협조 체계 구축 필요

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5	지역건축센터 시범사업 교용인력 및 인허가 공무원 간담회 일정 지연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각계 의견수렴, 공청회, 간담회 등 의견수렴, 선제적 화재대책 마련 추진, 지진 대비 내진개선 적기 대응 우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화재대책 관련 제도개선, 내진개선 등으로 건축물 화재안전성과 내진성을 강화하여 서민 생활 공간 안전확보 기대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(중대 산업재해 예방대책 발표)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주자·원청의 안전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안전대책 발표
  - \* 총리 주재 ‘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’ 상정(8.17.)
- (하위법령)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「지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」 제정('17.11.)
  - 아울러, 지하안전관리 관련 업무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\*을 규정하는 「지하안전관리 업무지침」 제정('17.9.)
    - \* 지하안전영향평가 작성방법 및 협의규정, 지하안전점검 실시방법 등
- (기술자 교육) 새로운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지하안전관리 실무자 교육과정 및 전문기술자\*의 교육방안 수립('17.4.)
  - \* 지하안전영향평가 실시를 위해서는 70시간 이상의 교육 이수 필요(시행규칙 제5조)
  - 법 시행 이후 영향평가 수행의 공백이 없도록 지하안전영향평가를 대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사전접수 추진('17.11.)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「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」 개정이 일부 지연
  - 내년 상반기('18.6月) 「지하안전법」 시행에 따른 자료를 반영하여 실효성 있는 「지하안전관리 기본계획(제1차)」을 수립할 계획\*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5	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개정,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 사전등록 지연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정책설명회 개최, 관련 TF회의 개최, 공청회 등의견수렴 등 적정 추진, 관계부처 합동대책 마련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예방중심의 안전대책 강화, 지반침하사고 예방을 위한 하위법령 정비로 국민생활안전 향상 기대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## &lt;수자원 시설의 안전성 및 안전관리 역량 강화 추진&gt;

- (치수능력증대사업) 극한 강우상황에도 댐이 붕괴되지 않도록 운문댐 사업을 준공하고, 충주댐은 45%, 평화의댐은 90% 공정률 달성
- (가뭄대응) 반복되는 가뭄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“댐 용수부족 대비 용수공급 조정기준” 적기 적용 및 종합 가뭄대책을 마련·시행
  - 봄 가뭄 대비 토론회 개최 및 용수공급상황 관련 보도자료 수시 배포로 가뭄현황 및 전망과 정부 대응상황을 대국민 홍보

## &lt;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첨단 물관리 구현&gt;

- 세종시 SWC 구축 시범사업의 안정적 착수를 위한 상호협력 협약체결과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
- SWG 기존 연구성과를 토대로 해외진출 및 상용화를 위한 후속과제 연구(SWG 기술 O&M 고도화) 착수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다목적댐만 용수공급 조정기준을 마련·운영하고 있지만, 극심한 가뭄을 대비하여 용수댐에 대해서도 조정기준 마련 필요
- 최근 가뭄 발생빈도 및 강도 증가 추세로 가뭄 분석·예측 기술 향상 및 취약 지도 구축 등 가뭄에 선제적 대응 시스템 마련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관계기관 및 국회 적극 대응으로 예산 확보 노력, 심각한 가뭄 문제에 비상용수대책 추진 등 적기 대응 우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치수능력증대 및 안전성 강화 사업으로 댐 안전 확보, 가뭄 대응 비상공급대책 추진으로 주민불안 최소화 등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국토부, 환경부, 행안부 부처 공동으로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 예방 대상지역 30개소 선정('17.6.30.)
- 국토부, 환경부, 행안부가 협업하여 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예방 종합대책(안)을 마련('17.12월)
  - 부처별로 치수계획을 수립·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연계 부족과 수방대책의 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기 위해 범부처 종합대책을 마련
    - \* 도시침수 예방사업(30개소)에 대한 국토부·환경부·행안부의 연계 추진방안 등
- 국토부, 환경부, 행안부 부처 공동으로 “특정도시하천유역 침수 피해방지대책법(안)”을 마련('17.12월)
  - 도시침수 예방사업 시행을 위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역할, 안정적 예산 확보, 사업시행, 사후관리 등을 구체화하는 제도적·법적 근거 마련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증가로 돌발홍수가 빈발하고, 도시 내수침수에 대한 취약성도 증가('17년 부산·청주 등 침수 발생)
  - '27년까지 도시침수 예방사업(30개소)을 완료하기 위하여는 잔여분 20개소에 대한 사업착수를 조기에 시행하고 예산도 확보할 필요
- ▶ (대책) '19년 10개소, '20년 10개소 사업착수 계획이며 '19년 예산으로 적정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재정당국·국회와 협의계획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민관, 산학연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, 도시침수예방 부처 합동 대응으로 정책연계 강화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국토부의 하천사업, 환경부의 하수도사업, 행안부의 풍수해저감사업을 연계추진, 도시침수 문제해결을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, 하천설계시 안전기준 강화로 재해예방에 기여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보 상시개방) 물 이용, 생태계 상황, 지하수위 변화 등을 고려하여, '17.6월부터 단계적 보 개방(1차 6.1일, 2차 11.13일) 및 모니터링 실시
  - 국조실·환경부·국토부 등으로 구성된 『통합물관리상황반』에서 개방 계획 논의, 댐·보 연계운영 협의회(중앙·수계)에서 관계기관·지자체·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·발표(언론브리핑 3회)
- (현장대응·기술개발) 물순환장치, 멀티녹조 제거장치 등을 대폭 확충(152대 → '17년 294대)하여 현장대응력을 제고하고, 『녹조기술센터』를 구축('17.3월)하여 중장기 녹조저감 기술개발 기반 구축
- (낙동강 하구) 생태가치가 높은 낙동강 하구 일대를 생태·문화공간 및 지역성장 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본구상 마련 착수(9.29)

\* 국토부-부산시-수자원공사 간 MOU 체결 및 협의회 구성·운영(10월~)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4대강 보 개방) 녹조저감 및 수질개선 성과 도출을 위해 '18년에도 제약시설 개선, 개방효과 분석을 거쳐 보 추가개방을 추진하는 한편,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, 보 처리방안 확정\* 계획

\* ① 존치 및 환경성 보강(수자원 활용계획 구체화), ② 철거 및 재자연화 등

- (아라뱃길) 관계부처, 지자체와 적극 협력하여 신규항로 개척, 유람선 취항 등 물류 및 여객운송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 노력 필요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4대강 보 개방 관련 사전조사, 전문가 자문 등을 구해 적기 대응하고 사후 모니터링 추진 우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4대강 수질개선 효과, 하천이용 규제완화로 국민의 편의 제고, 수변공간 이용활성화로 지역활력 제고에 기여

◆ 성과목표 4. 지속가능하고 품격있는 생활공간을 실현한다.

1

제로에너지건축 등 건축물 에너지 성능 강화

다소 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('17.1.20.) 및 '20년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화'를 위한 「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」 개정안 마련('17.11월)
  - '17년부터 시장형 공기업 제로에너지건축 조기 의무화를 시행(산업부 협업)하고, 10개소에 대한 제로에너지건축물 (예비)인증 완료
- 공청회, 간담회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을 거쳐 선진국(독일)의 단열 성능인 패시브 수준으로 지역별·용도별 단열기준을 강화('17.12월)
  - 현행 건축부위별 에너지 기준을 건축물의 종합적인 에너지 성능을 평가하는 '에너지소비총량설계'로 단계적 전환 추진
- 중앙행정기관 등의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그린리모델링 기획·설계를 우선 지원하고,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추가 지정(78개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, 시범사업 및 R&D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, 민간 시장의 자발적 참여는 아직 부족한 실정
  - 민간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금융프로그램(리츠·주택도시기금 활용 등) 등 다양한 녹색건축 성공모델을 적극 발굴·제시할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이해관계자 의견 충실히 수렴, 사업자 추가 지정으로 그린리모델링 수요증가에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선진국 수준의 패시브 건축기준 강화, 성능기반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 확대,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10건 달성
3-3. 정책만족도		4.58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(제도마련) 현행 물순환 관련 제도를 확대 개편(도시·군관리계획 수립지침 개정)하고, 물순환 활성화를 위한 근거법률 제정안 마련
  - 토지이용계획 수립 시 도시 내 물순환 체계도 고려하도록 도시·군관리계획 수립 지침을 개정(17.12, 도시정책과)하여 물순환 정책 토대 마련
  - 물순환 촉진 및 회복을 위한 기본원칙, 기본계획 수립 등을 반영한 근거법률안 마련 및 국회제출(17.12, 수자원정책과)로 물순환 활성화 도모
    - \* 현재 저영향개발(LID) 관련 기본법적 성격을 가진 법률 및 정부차원의 정식 매뉴얼이 없어 관련 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산업 활성화 등의 어려움 존재
- (기술개발) 빗물의 지하침투, 유출 저감 등 도시차원의 빗물 관리를 위한 저영향개발(LID) 기법 표준모델 및 설계 매뉴얼, 지침 등 개발
  - 현재 추진중인 R&D\*를 통해 다양한 저영향개발 요소기술, 계획·설계 매뉴얼, 지침 등\*\*을 다수 개발(특허 등록 25건, 출원 7건)
- (전략수립) 기술적, 입법적 지원 등을 위한 정책 연구포럼 구성·운영\*(17.3~) 및 의견수렴을 통해 물순환 활성화 방안 마련(17.9)
  - \* 국토부·환경부 등 정부, GI&LID센터(부산대), 수자원공사·LH 연구원, 전문가 등 참여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국토부와 환경부의 물순환 정책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국가차원의 정책을 추진해야할 필요성 제기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포럼, 관계부처 협의, 토론회 등 의견수렴 충실, 국내외 물관련 이슈 등 적기 반영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, 도시화 등으로 인해 심화되고 있는 도시홍수를 예방하고, 도시내 효율적 물관리 및 수생태·환경 개선 가능
3-3. 정책만족도		4.58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(바이오 항공유 시범운영) 국내 첫 바이오 항공유 활용 비행에 성공(17.11), 선진국 중심의 온실 가스 감축 녹색비행 대열에 동참
  - 국적 항공사의 바이오연료 활용 가능성 입증, 온실가스 배출량의 획기적 절감 계기 마련 등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대응력 강화
  - \* '17.11.8.(수) 대한항공, 옥수수 추출 바이오연료로 북미노선 운항(B777 여객기, 시카고/인천 노선) ⇒ 조선, 동아 등 언론매체 다수 보도
- (개도국 기술전수) ICAO·해외 개도국(몽골)과 파트너십을 체결(17.5)하고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관련 선진기술 전수
  - 바이오연료 활용결과, 온실가스 감축기법 등 자문 제공(17.6~12) 등을 통해 환경외교를 통한 국가위상 제고에도 기여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시범비행용 바이오연료 조달과정에서 해외 정유업체(유럽, 미국 등) 사정상 국내 수입이 어려워\* 과제 추진시 애로사항 발생
  - \* 연료를 아시아지역으로 배송한 전례 없음, 시범비행용 소량생산 불가, 연내 배송 불가능 등을 이유로 공급을 거절로 외국에서 직접 급유 후 국내 시험비행
  - 향후, 국내 바이오연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 사용 가능성 검증 뿐만 아니라 항공사 등의 바이오연료 조달 편의성 향상방안도 검토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민간전문가 자문단을 운영하여 수시 활용하고, 바이오 연료 조달에 어려움이 있었으나, 계획변경을 통해 대응·해결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시범비행을 통해 국내 바이오항공유 활용 가능성 및 온실가스 감축효과 검증하고 경험을 개도국에 공유 등 환경외교 실천
3-3. 정책만족도		4.37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훼손지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을 면제하고('17.7,법률개정), 정비사업 지원 TF를 정기적으로 개최(4회)
- 제4차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을 권역별로 승인('17.12)하고, 주민지원 사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위한 주민지원사업 기본전략 마련('17.9)
- 미집행 공원 해소 대책의 일환으로 임차공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대상 확대 추진\*
  - \* 임차공원 도입을 위한 공원녹지법 개정안 국회 발의('17.12), 훼손지 복구 대상을 미집행 공원으로 확대하는 GB법 개정안 국회 발의('17.12)
- 조경 분야 전반의 진흥을 위하여 공원·녹지 확충, 조경 산업 지원 등의 추진과제를 담은 조경진흥기본계획 수립 및 고시('17.9)
  - 추진과제 중 가장 우선적으로 조경 산업 진흥을 위해 조경지원센터·조경진흥단지·조경진흥시설의 세부 지정기준 마련(12.29.예정)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소규모 민간공원 제도 도입에 대한 환경단체 등의 반대 등으로 제도 도입이 계획 대비 지연
  - 국회와 환경단체와 협의해 왔으나, 제도 도입 시기를 조정해야 한다는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'18년초 도입 추진 예정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	훼손지 정비사항 활성화 위한 제도개선 방침 지연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자체 간담회, 정책워크숍, 공청회 등 현장의견 충실히 수렴, 훼손지 복구대상 확대 등으로 환경단체 반대의견에 적정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.4	소규모 민간공원 도입 관련 「공원녹지법」 국회 통과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개발제한구역에 대한 4차 관리계획 수립으로 종합적 및 체계적 보전·관리 가능, 미집행 민간공원 해소 기반 마련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(국토경관현장 제정) '16년 마련된 경관현장 초안을 바탕으로 제정위(3회), 소위(3회) 및공청회 개최(3.17), 대국민 공모전 실시(3~4월)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국토경관현장 최종 제정·공포(5.17)
- (평창올림픽 경관개선 지원) 평창 올림픽 도시경관 개선사업 확대(추경 35.6억 추가 확보) 및 실무 협업체계 구축 등을 통해 사업관리 철저로 올림픽 개최에 차질없이 준공 완료
- (경관행정 선진화) 개발사업 재심의 기준 명확화 등 경관심의제도 의무 도입('14.2) 후 나타난 미비점 개선을 위해 경관법 시행령(2.28) 및 경관 심의 운영 지침(국토부 고시) 개정(6.22)
  - 경관심의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경관위원 역할, 유형별 경관심의 주안점 등을 소개하는 경관심의위원 안내 가이드 제작·배포(3월)
  - '17년 국토경관디자인대전의 성공적 개최(7.12), 경관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최초 실시(11.10) 등을 통한 경관 인식 제고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지역의 경관 향상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예산 전액 삭감
  - 국토환경디자인 지원사업 등 '09년부터 지원하던 지역 경관 향상 보조금 예산이 '18년에는 전액 삭감되어, 신규 사업 유형 발굴 등 지속적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4	지자체 경관담당자 직무교육 지원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현장제정위 운영, 공청회, 실무자 협의체 등의 견수렴, 예산확보를 위한 국회 적극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국토경관현장 공포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지속 가능한 국토경관 형성의 기본방향 설정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대국민 소통 강화) 「용산공원展」(전쟁기념관 등)을 개최('16.12~'17.2), 국토발전전시관 개관기념 용산공원 기획전시 개최('17.11~'18.2)
  - 용산공원 블로그 개설 및 아카이브 구축 완료('17.6)
  - 페이스북을 통해 용산공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카드뉴스, 인포그래픽 등으로 제공(39건) 및 흥미·관심 제고 등을 위해 참여이벤트 진행(7회)
  - 홈페이지 개편('17.3)으로 사용자 정보 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
- (조성계획 公論化) 공개 세미나 9회\* 개최, 공원정담 2회 개최('17.11~12)
  - 일반국민 등이 참여하는 국민소통 네트워크를 구축(650여명) 하여 공개세미나 주요 논의자료 및 개최 결과 공유
- (내실있는 계획 도출)
  - 각계각층 대상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조성계획안 보완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향후 공론화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, 온라인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을 통한 소통 창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열린 계획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
  - 임시개방, 부지 상세조사 실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수립된 각계 의견을 실제 공원조성과정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 조치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기획전시(2회), 세미나, 서울시와 실무협의체 구성을 통한 이견 조정 등 적정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대국민 소통 강화, 조성계획 공론화 등을 통해 긍정적 언론평가 유도 및 국민적 관심도 재조명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법령개정) 「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(17.7)하여 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확대
  - (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) 기존 단독·공동주택(세대별 지원) → 1·2층 근린생활(소규모)과 업무시설(오피스텔) 중 주거용도 시설
  - (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) 3개월 → 4개월(7~9월 → 6~9월)
  - (주민지원사업 종류 다양화) 기존 주민복지·소득증대사업 외에 방과후 학습지원, 일자리 창출사업, 공용주차장 설치 등 사업범위\* 확대
  - (소음부담금 부과체계 개선) 항공기 소음등급체계를 전면 개편하고, 항공기 소음도에 따라 부과요율을 차등적용
- (연구용역) 양양·무안 공항 등 훈련용 항공기 운항 공항의 소음 실태를 파악하고 합리적인 소음기준 설정방안 검토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「공항소음방지법」 제정(10) 등을 통해 사업을 본격 추진한 결과, 일부사업(방음시설, 95%)이 완료단계에 이르는 등 시행하여 왔으나,
  - 지속적인 항공기 운항증가로 소음도는 높아져, 공항주변 주민들의 갈등과 기존 대책사업에 대한 불만은 깊어지고 있는 실정
  - 이에, 소음대책사업 추진상황 조사 등 사업평가를 통해 사업종류·대상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소음대책사업 추진방향 재정립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공청회 및 소음대책위원회 위원 등을 통해 주민 의견 수렴 및 지원확대 설명, 관련규정 적극 개정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공항주변 소음피해지역의 전기료 지원 대상 및 주민지원사업 종류 확대를 통한 공항주변 주민의 삶의 질(생활환경 보장 등) 향상

◆ 성과목표 5. 한반도의 통일·화합시대를 선제적 준비한다.

1

유라시아 新물류루트 개척 등 물류기업  
해외진출 촉진

다소 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유럽向 블록트레인 운행 개시를 통해 높은 운임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유라시아 복합운송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물류루트 개척
- 한중일 3국 정부 간 협의를 통해 유라시아 해상-철도 복합운송 공동연구를 개시함으로써 공동 시범운송 사업 제안을 위한 토대 마련
- ‘한중 물류산업 포럼’ 재개 및 ‘한중 물류의 날’ 개최 논의 등 한중간 정기적인 물류교류의 장 마련으로 지속적인 물류교류 협력체계 구축
- 화주·물류기업 해외시장 동반진출 컨설팅 지원 및 현지밀착 신규 지원, 신홍 물류시장 정보제공 등으로 해외시장 개척기반 강화
  - KOTRA를 통해 현지에 진출한 국내 물류기업이 화주기업을 대상으로 현지영업 확대시 필요한 현지조사, 마케팅 등 현지진출 밀착지원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유라시아 복합운송 루트 개척) 추가적인 물류루트 개척·확대를 통한 수출입 물류루트 다변화 필요
  - 수출입 물류가 절대적으로 해상운송에 의존하고 있어 신물류루트 개척을 통한 물류루트 다변화 및 리스크 분산 필요

\* ‘15년 기준 99% 이상을 해상운송에 의존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간담회, 기업간 협업 주선 회의 등 각계 의견 충실히 수렴, 적극적 대응으로 한중일 3국 공동 연구 개시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운임경쟁력을 갖춘 新물류루트 개척, 물류기업의 안정적인 해외진출 지원 및 해외 네트워크 확대기반 마련

**【전략목표Ⅱ】** 서민 주거복지를 실현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.

◆ **성과목표 1.** 공적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운영·관리 제도를 개선한다.

1

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

매우 우수

### (1) 평가결과

#### □ 주요성과

-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최근 5년 평균(9.7만호) 대비 31% 확대하여 12.7만호를 공급(준공)하여 서민 주거안정에 기여
- 노후공공청사 복합개발(선도사업 19개소 선정, '17.9)을 신규로 도입하고, 공공리모델링, 청년·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등 첫 공급에 착수
  - \* 공공리모델링 입주자 모집(696세대, 11.30), 매입임대리츠 입주자 모집(178세대, 10.27)
- 서민 주거안정 강화를 위해 '18~'22년 건설 7만호, 매입·전세임대 6만호 등 연평균 13만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을 확정
- 생애단계별 수요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임대주택 지원 강화
  - 청년 매입임대, 세어하우스 시범사업을 도입·추진하고, 신혼희망타운 등도 신규로 도입

#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주거수요를 반영한 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지원 프로그램 패키지를 제공하고, 생애단계에 맞추어 장기적으로 지원 필요
  - 소형·일자리 연계형 청년주택 지원, 육아 특화형 임대 등 신혼희망타운 조성, 고령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연계 주택 공급 등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정책현장 방문, 전문가·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공공임대주택 확대 및 수요자 맞춤형 대책 적기 마련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최근 5년 평균 9.7만호 대비 31% 확대하여 올해 공공임대주택을 12.7만호 공급,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* 결과 91점으로 우수
3-3. 정책만족도		4.86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신혼부부 전세임대 0.4만호) 11월말 기준 3,676호(90%)를 공급하였으며, 차질없는 목표 달성을 위해 12월에 물량을 지속 탐색하여 0.4만호를 공급 완료할 계획
- (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제도 개선) 매입임대리츠를 통해 공급되는 주택 유형이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아파트임을 고려하여, 주택이 신혼부부에게 최우선 공급되도록 「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」 개정 완료\*
  - 더불어, 지역별 주택가격 차이를 감안하여 매입 상한 가격을 지역별로 차등화하여 공급 활성화 도모(기금운용계획 변경 완료)
- \* 현행 전국 3억원 이하 동일 기준 → 수도권 4억, 광역시 3억, 지방 2억
- (신혼부부 특화단지 추진) 신혼부부에 국민임대주택 물량의 80% 수준(현행 30%)까지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안을 포함하여,
  - 국공립 어린이집 등 육아 특화서비스, 단지 내 위험요소 제거 등 특화설계 방안 등을 담은 특화단지 방침안을 마련하였으며,
  - 이를 통해 정책 수요자가 선호하는 맞춤형 임대주택 공급을 도모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어린이집·키즈카페 등 육아특화 서비스와 신혼부부 맞춤형 평면을 적용하는 신혼부부 특화단지가 보다 확대 공급될 필요
  - 또한, 향후 지자체와 협력하여 추가적인 복지서비스 연계 및 제공 방안을 발굴할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2	국민임대주택 신혼부부특화단지 추진방안 관계기관 협의 추진 과정상 일부 계획 지연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토크콘서트, 사업자 의견 청취 등 의견수렴,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확대 등 현실 여건에 맞게 제도개선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전세임대, 특화단지 추진으로 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하고 안정적인 주거 마련으로 주거복지 실현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노후 공공건물 복합개발) 선도사업 19개소(목표 : 4개소)를 조기에 선정 완료('17.9월), 지자체 공모를 통해 연말까지 추가 사업 선정 예정
  - '새정부 경제정책방향(관계부처, 7.25)'에서 노후청사 복합개발을 통한 청년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하여 홍보효과 및 정책 효과 제고
  - 건축규제(건폐율, 용적률 등)를 법정 한도까지 완화하여 사업이 활성화 되도록 국회협의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(공공주택특별법 개정, 10.24)
- (재개발·재건축 매입) 금년 목표(600호)중 현재까지 적극 협의를 추진하여 580호 입주자 모집 완료, 남은 물량도 연중 목표달성 예정(12.29)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사업계획 수립 및 건설기간을 감안할 때 '22년까지 청년임대주택 1만호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사업지 조기 확정이 필요
- ⇒ 지자체 설명회, 추가 사업지 공모 등을 통해 지자체,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1만호 사업지 조속 확보 추진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관계기관 TF 운영, 제도개선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, 공급평형 및 수혜자 확대 등 주거현실을 적정 반영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.8	재건축/재개발 청년주택 9백호 매입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입주자 모집시 16:1의 경쟁률 보이는 등 청년층의 높음 관심, 지역여건에 맞는 맞춤형 사업 추진으로 지역활력 제고 기대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세어형) 주 공급대상인 청년층의 주거공간 공유에 대한 선호를 반영한 '공용공간 강화형' 세어형 공공임대주택 건설모델\* 마련

\* 전용면적 14㎡ 내 침실, 화장실, 소규모 부엌 등을 구성하고, 입주자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용주방 및 거실, 공동 세탁실 등 '커뮤니티 공간'도 별도 제공

- 입지여건이 양호한 서울잠실, 고양지축 등 행복주택 신규 사업지 4곳에 '공용공간 강화형' 건설모델을 적용하는 시범사업 추진

- (대학협력형) 중부권역 충북대, 남부권역 경상대 및 사업시행자(LH)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각 대학 내 유희부지 중 최적의 후보지를 발굴하여 총 350호 규모의 행복주택 공급 추진

- 대학 내 부지를 활용하여 대학생 위주로 공급하는 사업특색을 반영하여 저층부에는 교육·연구지원시설(ex. 세미나룸, 창업지원시설) 배치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대학협력형) 부지제공대학의 재학생뿐만 아니라 인근 타대학생도 입주가 가능하여 대학 내 외부인 유입에 대한 우려 제기

⇒ 외부인 유입문제가 최소화되도록 각 대학이 보유한 유희부지 중 도로와 접한 외곽부지를 후보지로 선정하여 시범사업 추진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셰어하우스 입주자 대상 조사를 통해 '공용공간 강화형' 건설모델 마련, 다양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 실시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대학내 유희부지 활용 350호 규모 행복주택 공급, '공용공간 강화형' 셰어하우스 건설모델 시범사업 추진

◆ 성과목표 2. 맞춤형 주거지원을 강화하고 사회통합형 주택정책을 추진한다.

1

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및 공공지원주택 공급기반 마련

다소 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사회취약계층 우선공급) 취약계층 우선 입주기준을 전세임대 주택 등으로 확대하기 위한 공공주택업무처리지침 개정안 마련(9월)
- (신혼부부 주거지원)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시 자녀수가 많을수록 가점을 확대하고, 다자녀 특별 공급에 넓은 평형 공급물량을 확대(LH 내부지침 개정, 1월)
- (장애인·고령자 주거지원)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자 선정시 경쟁이 있는 경우, 단지별 여건에 따라 장애등급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(9월)
  - 독거노인이 주로 거주하는 주거약자용 주택에 적용되는 편의시설 설치기준에 홀몸노인안심센서를 추가(주거약자법 시행령 개정안 마련, 9월)
- (주거급여 확대) 주거급여 사각지대 해소, 지원기준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'제1차 주거급여 기본계획('18~'20)' 수립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사회취약계층 및 장애인·고령자, 신혼부부 등에 대한 맞춤형 주거 지원 확대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안을 마련 필요
- ☞ 주거복지로드맵 발표 이후, 입법예고 등 절차에 즉시 착수(12.13) 하여 '18년 1분기에 관련규정 개정 완료 예정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주거복지 토크콘서트 등 대국민 의견수렴, 전문가·시민단체 간담회 실시, 신혼부부 및 저소득가구 지원강화 방안을 정책에 추가 반영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사회취약계층과 신혼부부에게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거복지 제고 기대
3-3. 정책만족도		4.74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층간소음) 세대 간 경계벽이 차음성능 면에서 취약한 블록 및 벽돌조인 경우 줄눈 부위에 빈틈이 없도록 시공기준 개선
- (미세먼지) 기계환기설비 고성능 외기청정필터 성능평가 기준 강화 및 레인지후드 배기풍량, 소음 등 성능기준 도입
  - 공동주택 내 이동형 충전기를 통한 전기차 충전이 용이하도록 500세대 이상 신축 공동주택에 콘센트 설치 의무화
- (층간흡연) 공동주택 세대 내 전용공간 흡연 피해를 위한 자율 조정기구 설치·운영 관련 제도적 기반 마련(공동주택관리법)
- (장수명주택) 장수명주택 실증단지 착공\* 및 시장보급 활성화 차원에서 장수명주택 표준모델 기본설계 가이드라인 배포
  - \*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2-1생활권 M3블럭 1080세대 중 116세대 적용
- (공업화주택) 건설 기술 개발 및 실증을 통한 모듈러 실증주택 건설 및 설계 표준화를 위해 모듈러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층간흡연) 간접흡연 피해 및 담배연기 측정방법 등이 기술적으로 곤란하며, 설정 기준 이하가 안전한 흡연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주어 현행금연정책과는 배치(복지부 및 환경부 의견 수용)
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사례가 증가하는 만큼 지속적인 정책적 고민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주기적 R&D 회의 및 공청회, 전문가 및 업계 협의, 관련부처 적극적 대응 등을 통해 정책 원활히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충간소음·흡연 예방 및 갈등 해소를 위한 제조 최초 도입, 미래형 주택 시범사업 기반 마련 등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도시정비법을 개정('17.8)하여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모든 용역계약으로 확대하고, 관리처분계획 검증을 의무화하여 정비사업 용역계약의 투명성 제고 기대
- 재난안전법상 안전위험 D, E 등급 주택에 거주하는 세대 및 단독·다세대 등 저층 노후주거지가 밀집한 주택재개발 및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의 이주 촉진을 위해
  - '17년도 추경을 통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전세자금을 저리(1.3%)로 지원하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기금예산을 신설하였으며, 60억원의 이주자금을 지원 중으로 연내에 수요자에게 지속 지원 계획
- 도시정비법을 개정('17.8)하여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의 조합원 주택공급수를 1주택으로 제한하여 재건축 시장의 안정성 제고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(안전위험 건축물 이주지원) 이주 기피계절로 다수의 수요자가 '18년 중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점 등으로 인해 전세대출 수요가 저조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상황
  - 대상자에게 직접홍보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인 공공기관 등의 수요 조사, 집행홍보 등 추가 홍보방안을 강구하고, 대출문의 현황 파악 및 집행부진사유 분석\*을 통해 집행을 제고를 위해 노력

\* '18년도에는 재개발구역의 관리처분인가 후에는 세입자를 지원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지원대상확대(안)을 재정당국과 협의하여 집행을 제고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자체, 전문가 등 협의체 운영, 조합·업계 설명회 및 지자체 간담회 실시, 도정법 관련 국회 적극 설득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계약제도 개선으로 주택정비사업 투명성 강화, 위험건축물 이주지원으로 국민 안전 제고

◆ 성과목표 3. 주택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한다.

1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

다소 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정밀 모니터링 추진) 주택시장 상황이 입지선호도, 지역별 경제 여건 등에 따라 지역 간 차별화 양상이 커짐에 따라 모니터링 강화
  - 정확한 시장상황을 점검하고, 현장의 분위기 및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관계기관(감정원)과 합동으로 주택정책 현장점검(전국) 실시
    - \* 전국을 단위로 '17년 총 6회 실시(2.20~21, 3.22, 5.24~26, 6.8~9, 7.20~21, 11.21)
- (맞춤형 대책 발표) 일부지역의 국지적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매매시장 및 전월세 시장에 대한 맞춤형 대책 마련·발표
  - 과열지역에 대해 투기지역·투기과열지구를 지정하고,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,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및 LTV·DTI 강화 등 금융규제 강화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발표(8.2, 9.5)
  - 향후 5년간 공공·공공지원주택 100만호 공급 등 생애단계별·소득수준별 맞춤형 지원방안(11.29)과 세금·건보료 감면 혜택 등 인센티브 강화를 통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(12.13)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통해 지역의 아파트 시장은 진정되는 국면이나, 재개발·재건축 시장 중심으로 재과열될 가능성 존재
  - ☞ 주택시장 정밀 모니터링을 지속 시행하고 기발표한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세미나, 강연, 언론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동향 파악 및 현장의견 수렴, 정책여건에 맞춘 각종 안정화 대책 적기 발표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8.2대책 이후 대책의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행되면서 투자수요 감소 등에 따라 전국 집값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지속
3-3. 정책만족도		4.39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주택도시기금 지원) 당초 목표(18만가구)보다 많은 22만 가구에 전세·구입자금을 지원하고, 차주 보호 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
  - (버팀목대출) 13만 가구의 서민 임차인에게 저리의 전세자금을 지원하고, 신혼부부 우대 금리 확대(0.5→0.7%p, '17.1) 등 지원 강화
  - (디딤돌대출) 9만 가구의 서민 실수요자에게 저리의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고, 실수요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
- (전세보증금 반환보증) 공급과잉 및 역전세난 우려에 대응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도 개선 지속 추진
- (청약제도)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8.2 부동산 대책 등을 통해 청약제도를 개편
  -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순위 자격 요건\*을 강화하고 가점제 비율을 상향하여 무주택 실수요자의 당첨 기회 확대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신혼부부 전용 전세·구입자금 대출, 취약한 주거 환경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 등 지원 확대 추진 필요
- 공급과잉, 역전세난 등 우려에 대비하여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활성화를 위한 추가 제도 개선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다양한 채널의 이해관계인 의견을 정책에 반영, 관계기관 적극 설득으로 유한책임대출 확대, 디딤돌대출 수요 다양화 등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주택자금 대출 실수요자 지원 확대, 청약제도 개편으로 실수요자 당첨기회 확대, 전세보증금 보호 강화 등 효과 기대

【전략목표Ⅲ】 편리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.

◆ 성과목표 1. 대도시권 교통혼잡을 해소한다.

1

출퇴근 교통편의 제고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

매우 우수

### (1) 평가결과

#### □ 주요성과

- 출·퇴근 교통편의 제고를 위해 경기 ↔ 서울간 광역버스 4개 노선\*을 대상으로 좌석예약제 시범사업을 실시('17.7~)하고,
  - 출퇴근형 M버스 등 총 5개 신규 M-버스 노선\*을 운행 개시하였으며, 시내버스 운행제한 규정 완화(30→50km) 추진(12.1~ 입법예고)
- 대도시권 교통사각지대 해소 및 틈새시장 창출 등을 위해 수요응답형 여객서비스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여객법 개정완료(12.8일)
- 프리미엄 고속버스 운행노선을 확대, 서울~대구, 강릉 등 12개노선에 신규투입(1일 81회), 기존 2개노선(서울~부산, 광주) 증회(1일 16회增, 6.30)
- 버스 통행시간 단축 및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등을 위해 영동고속도로 신갈Jct~여주Jct 구간(41.4km)에 주말·공휴일 버스전용차로 신설

#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CNG버스 저변을 확대하기 위한 충전 인프라의 확충이 필요하나 CNG충전소는 전국에 197개소에 불과
- ☞ 미세먼지 대책('17)의 일환으로 '22년까지 전국 주요 도로변에 복합휴게충전소 160개소 건설을 추진할 계획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79	고속버스 소화물 운송제도 개편 추진과정에서 일부계획 지연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자체 및 업계 간담회와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좌석예약제 노선 및 규모 등 적정 시행, 수요 변화에 맞게 M버스 운행시간대 조정 등 적정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수도권 출퇴근 시간 단축, 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, 고속버스 서비스 제고 및 안전수준 강화
3-3. 정책만족도		4.98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수도권 전철 급행화 추진 방안 마련('17.8)
  - 대피선 확보 노선 급행열차 즉시 신설·확대, 대피선 미확보 노선 단계별 급행열차 투입,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도입, 수도권 순환망 구상
- 대피선 설치가 필요한 경부선 등 4개 노선 순차적 추진 중
  - (경부선) 역사 시설물 사전 검토('17.9~10월)를 거쳐 대피선 2개소 (금천구청·금포역) 설치를 위한 설계 발주 준비 중
  - (분당·과천·일산선) 급행화 관련 선형 연구용역에 대한 검토 등을 거쳐 예비타당성 조사 추진 방안을 마련('17.11월)
- 수도권 광역 급행 철도 A노선 삼성~동탄 구간 22년 준공 추진
  - 서울시가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구간(삼성역~봉은사역, 950m)에 대해서는 협의체\*를 구성하여 정기적 추진현황을 점검 중('17.3~ 4회)
- 도시교통난 해소를 위해 광역·도시철도 확충 추진
  - 경의선(용산-문산) 복선전철 잔여 사업을 완료, 전체사업 준공 고시
  - 부산도시철도 1호선 다대 연장(7.98km) 개통('17.4.20), 석남연장 기본계획 변경 승인 등 도시철도 7개 사업, 광역철도 9개 사업 차질없이 추진 중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수도권 전철의 이동시간 단축효과를 빠른 시일 내에 시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급행화 추진 방안을 조속히 이행할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지자체, 관계기관, 전문가 등 의견수렴 충실, 공정점검 TF를 통한 차질이 예상되는 사업 집중 관리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수도권 전철 급행화로 일반철도 대비 이동시간 최대 33% 단축 효과 발생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수도권 광역급행철도) A노선(과주~삼성)은 민자기본계획(RFP) 수립·고시(12.29) 및 B·C노선에 대한 추진대안 마련(12.29)
- (신안산선) PQ 및 제안서 평가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(트루벤)를 선정(4.28) 하고 협상계획을 수립하여 협상 착수(5.30일 1차 본협상)
  - RFP를 변경고시(9.7)하였으나 사업계획서 접수결과(12.6) 1개 업체만 신청하여 즉시 재고시(12.12)
  - \* '18.1.26일 접수결과 단독응찰 시 (일정기준 충족 시)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추진
  - 한편, 트루벤 측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 취소 관련 행정 소송(집행정지 포함) 및 행정심판에 적극 대응 중
- (신분당선) '16.8월 착공한 용산~강남 1단계 구간(신사~강남)의 공사를 차질없이 추진 중
  - 2단계 구간(용산~신사) 노선 결정을 위해 주한미군, 美대사관,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노선 결정 추진계획 수립(12.29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신안산선) 우선협상대상자가 취소되어 RFP를 다시 고시하는 등 추진일정이 다소 지연되었으므로, 협상 등 후속절차를 조속 추진
- (신분당선) SOFA 협정에 근거한 실무협의체(JWG)를 적극 활용하여 안보에 차질없는 범위내에서 노선 협의 및 공사일정 확정 등 추진

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전문가 간담회, 자문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 적극 수렴, 신안산선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관련 지정 취소 및 변경고시 등 신속한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수도권 광역급행철도, 신안산선 및 신분당선 개통시 수도권 이동편의 대폭 증진 기대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(혼잡도로개선) 6대 광역시로 한정된 혼잡도로 개선 지원사업 대상을 늘려 지방 대도시의 교통혼잡 해소 지원 기반을 마련
  - 현 혼잡도로 개선 사업의 적용범위와 국고지원규모를 확대하는 방안 마련을 위해 타당성 연구 용역 추진('17.2.13 ~ '18.2.7)
  - 가용예산규모를 감안하여 인구 50만이상 대도시로 확대방안 마련
- (설계기준마련) 본격적인 자율주행자동차 시대에 선제적 대비
  - 자율주행자동차 도입으로 이용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이 향상됨에 따라 자율주행도로 보급 촉진을 위해 전용도로 설계검토 기준 마련
- (교차로형식발굴) 도로상 정체 유발의 주원인인 교차로에 대해 새로운 형식을 발굴하고 설치 가이드라인 구축
  - 국외에서 적용하여 운영 중인 특수유형 교차로를 소개하여 국내의 다양한 도로·교통 조건에서 적절한 교차로를 설계하는 데 기초자료 제공

#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적용범위와 국고지원규모의 확대를 위해 재정당국과 지속적인 협의 추진 필요
- 자율주행기술과 관련 자동차 성능이 개선됨에 따라 설치기준 및 용량분석자료의 지속적으로 보완 필요
- 새로운 형식의 교차로를 제시하였으나 설치확대 및 정착을 위해 세부적인 설계기준 보완 및 홍보 시행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55	자율주행 등 연구용역 추진계획 방침 지연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전문가 자문, 관계기관 의견조회 등 현장의견 수렴 및 정책 반영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자율주행 도로기준 마련 및 교차로 형식기준 변경 노력을 통해 교통혼잡 완화 및 보행자 안전성 향상 기대

◆ 성과목표 2. 국가기간 교통망의 공공성을 강화한다.

1

인천국제공항 허브공고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

매우 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3단계 확장) 제2여객터미널 건설 등 3단계 확장사업 및 개장 준비를 차질 없이 완료('17.12)
- (4단계 확장) 예비타당성조사 통과('17.6) 및 기본계획 수립·고시('17.11)를 거쳐 설계 착수('17.12)
- (공항복합도시개발) 국제업무지역 1구역(IBC-I) 복합위락시설(파라다이스 시티) 오픈('17. 5) 및 2구역(IBC-II) 복합리조트(인스파이어 리조트) 실시계획 승인('17.12)
- (공항접근도로 통행료 인하) 민자법인과의 협상을 통해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('17.8, 승용차 기준 700원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3단계 건설사업 완공('17.12)을 통해 '22년까지 수요(72백만명/년)에 대응할 계획이나, 예측보다 빠른 항공수요 증가로 '22년경부터 일부시설의 용량이 포화될 전망
- ⇒ 장래 항공수요에 선제적 대응 및 인천공항의 동북아 허브공항 경쟁력 강화를 위해 4단계 확장사업(제2터미널, 제4활주로, 계류장 등) 적기 추진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인천공항 3단계 사업의 관계기관 합동 개항준비단 운영, 시민단체·관련 협회·지자체 등 수시 자문 외의 개최 등 현장의견 수렴, 적정 갈등관리로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인천공항 3단계 확장으로 항공공수요에 적기·대응은 물론 평창동계올림픽 성공적 개최에도 기여, 인천대교 통행료 인하로 공항 이용객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
3-3. 정책만족도		5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(철도공공성 강화) (주)SR의 공공기관 지정을 위하여 이해관계자 및 기재부 등과 지속적인 협의를 실시(11.2, 11.16)
  - 간담회 등을 통해 '기타 공공기관' 지정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, 공운위 의결을 통해 공공기관 지정\* 추진('18.1, 기재부)
- (철도산업 육성) 철도 R&D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 미래선도형 기술에 재투자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하고, 핵심부품별 육성전략 마련
- (철도역 중심 교통HUB 구축) 점용허가 30년이 경과되어 기간이 만료된 철도 민자역사(舊서울역, 영등포역, 동인천역)의 처리방안을 마련하여, 향후 전체 민자역사\*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원칙 수립
  - 서울역 통합개발을 위한 기본구상(안)을 수립하여, 미래 서울역의 위상 강화, 개발주체별 중복투자를 방지하고 서울역 지하화 등 도시재생과 연계하여 청사진을 마련

#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철도공공성 강화) (주)SR 등은 공공기관 지정에 대하여 이견이 있으며, 공공기관 유형\*에 대하여도 상반된 의견 존재
  - 간담회, 기재부 등 기관간 사전협의 등을 통해 국민에 보다 이익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
- (철도역 중심 교통HUB 구축) 국가귀속된 민자역사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유재산법상 사용허가로 운영시, 점용허가와 달리 운영상 제약이 발생하여 이에 대한 제도개선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간담회 등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, 사회적 요구를 수용하여 코레일-SR 통합 적극 추진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철도 공공성 강화와 역중심 교통허브 구축으로 교통복지 향상 및 민자역사 활용가치 향상 도모
3-3. 정책만족도		4.54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통행료 면제)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 후 '17년 추석 기간 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, 평창올림픽 영동선 통행료 무료화 방안 협의 마련(17.11)
- (통행료 경감)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전기·수소차 통행료 50% 할인 시행('17.9)
  - 서울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방안마련(2.23), 차액 보전을 위한 투자자 모집(12.1)
- (민자도로 관리·감독체계 구축) 공공성 강화를 위한 「유료도로법」 개정안 국회제출(8.14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통행료 면제) 現 명절 기간 통행료 면제는 명절 전일·당일·익일 3일간 운영되고 있으나, 추후 통행량이 집중될 경우 면제기간 등을 조정 검토 필요
- (통행료 경감) '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친환경차 통행료 감면(50%)은 추후 전기·수소차 보급추이를 고려하여 할인을 조정 필요
- (민자공공성 강화) 서울외곽 북부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결과를 토대로 수원~광명, 천안-논산 등 他 민자사업으로 확대 필요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역 설명회, SNS를 통한 국민투표 결과 등을 통해 현장의견 정책반영, 민간사업자에 대한 적극 대응으로 통행료 인하 적기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통행료 인하와 관련 제도 개선으로 국민의 교통비 부담 경감 등 공공성 강화
3-3. 정책만족도		4.80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평창 동계올림픽 대비 도로·철도·공항 등 광역교통 인프라\*를 적기에 구축하고, 각 수단 별 운영계획 및 종합교통대책을 마련
  - \* (도로) 제2영동('16.11), 동홍천-양양('17.6), 안양-성남('17.9) 고속선 및 국도 6·59호선 (철도) 인천-원주 기존선 고속화, 원주-강릉 복선전철 구축, 운행계획 수립('17.6) (공항) 인천공항 제2터미널 개항('18.1) 준비 및 시설개선, 양양공항 전반적 개선
- 정기적인 고위급·실무급 점검회의 및 현장시찰 진행으로 올림픽 준비현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적기 개통 및 안전 운영 확보
- 휴게소·기차역·공항터미널 등 주요 교통시설을 활용하여 올림픽 홍보 및 붐업에 기여하고,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 개선
- 올림픽 교통수요에 응답하여 조직위와의 협력으로 모바일 앱 개발 (조직위), 환승휴게소 무료셔틀 운행, 개최지 택시확대 등 정책 지원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서울 올림픽이나 한·일 월드컵 등과 달리 대도시권이 아닌 강원 산간지역에서 개최되는 평창 올림픽에 관한 교통수요 데이터 부족
  - ☞ 단, 현재 조직위에서 입장권 구매현황 조사 등으로 지역별·일자별 교통수요를 1월 중 산출할 예정으로, 이를 운영계획에 반영 추진
- 장애유형별, 지역별 교통수요에 대한 정확한 통계 부재로 패럴림픽 등 기간 교통약자의 개최지 방문을 위한 교통대책이 다소 미흡
  - ☞ KTX 내 장애인석을 추가 확보했으며, '18.1~2월 중 패럴림픽 입장권 구매동향을 파악하여, 조직위와 협조를 통해 방안 마련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장애인석 교통편의 확대로 패럴림픽 지원, 강원권 숙박비 문제에 대응하여 수도권-개최지간 교통수요 증대 등 적정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국내 교통 인프라를 대거 확충하고, 특히 강원 산간 지역의 도로·철도 인프라 구축을 통해 수도권~강원 간 접근성을 대폭 개선
3-3. 정책만족도		4.82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철도서비스 혁신) 광역 급행열차의 확대를 통해 수도권 출퇴근 이용자 등의 편의가 획기적으로 개선(6~20분 운행시간 단축)되었으며,
  - 노후된 일반철도 차량의 내·외부 리모델링을 통한 열차 이용의 쾌적성 제고 및 임시열차 증편 등을 통한 일반열차의 혼잡도 개선
- (벽지노선 공공성 강화) 제도개선 TF 회의, 전문기관 연구용역 등을 통해 신규 벽지노선 선정기준 등 제도개선(안) 마련
- (단위사용료 공감대 형성) 첨예한 이해관계로 철산위 의결('17년부터 단위사용료 적용, '14.9)에도 불구하고, 단위사용료 도입이 반복적으로 연기되어 왔으나, 지속적인 협의와 설득을 통해 기관 간 합의(안) 도출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광역급행) 열차운행 조정, 인프라 개선 등을 통해 타 노선에 급행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
- (고속철도 접근성 향상) 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 등 철도서비스 개선을 위해 고속-지선철도 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
- (철도물류)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는 철도물류 수송량 증대 등 철도물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투자 확대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철도서비스 시민평가단 등 현장 중심의 의견 수렴을 통해 이를 정책에 적정 반영, 광역 급행 열차 확대 요구에 4개 노선 우선 시행 등 적정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급행열차 확대 수도권 출퇴근 교통난 해소, 일반철도서비스 개선으로 철도이용자 만족도 제고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도로점용 허가대상에 수소차 충전시설을 포함하고 전기·수소차 충전시설 도로점용료 50%감면 내용으로 도로법 시행령 개정('17.12)
  - 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도로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책적 지원 기반 조성
    - \* 도로법 시행령 제55조제3호 수소자동차 충전시설 신설
- 도로 상공·지하 공간의 민간이용 등을 허용하여 창의적 도시 디자인, 도시공간의 효율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(안) 마련
  - \*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안 발의(조정식의원, '17.12.01)
    - 공모전 개최를 통해 다양한 입체적 개발모델 발굴
      - \* 도로공간의 입체적 활용을 위한 아이디어 공모전(7.14~11.30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관련부처) 환경부·산자부 등 기존 충전인프라 구축 부처와의 협조체계 구축 및 재정당국 실국(기재부 예산실, 재정관리국 등)간 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정책 조정이 필요
- (관련법 개정) 도로공간의 입체개발에 관한 법률 등 타법 제·개정에 따라 도로법,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개정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65	‘입체도로 공모입상작 시상 및 홍보’ 관련 일정 다소 지연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예산확보를 위해 재정당국 적극 대응, 공청회 등 현장의견 수렴 등 평이한 수준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충전시설 구축을 위한 기반 마련, 도로의 상공·지하공간 활용 허용으로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기대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김해신공항) 영남지역 5개 지자체 합의에 따라 사전타당성용역(A DPi)을 시행한 결과, 김해신공항을 최적 대안으로 결정('16.6)
  - 예비타당성 조사를 완료('17.4)하고, 신공항의 건설규모 및 운영계획 검토 등을 위한 기본계획수립용역 진행('17.8.4~ ) 중
- (제주 제2공항)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입지선정('15.11), 예타('16.12) 후 주민들이 우려하는 동굴훼손 등 검토를 위해 기본계획 용역 前 동굴조사 및 전략환경평가 용역 진행 중
  - ☞ 지역사회 기여 방안을 마련하여 갈등을 최소화하는 한편, 지역 의견을 수렴하면서 계획대로 신공항이 개항(제주 '25, 김해 '26)될 수 있는 본격적인 사업의 기틀 마련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공항은 철도·도로 등의 선형시설과는 달리 지역 거점시설로 공항 예정지를 중심으로 소음, 거주이전, 사업반대 등 다양한 갈등 상존
  - “민·관 합동협의체” 구성, 설명회,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 및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소통 노력 중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갈등관리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 정책의 기본골격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반대위 의견을 최대한 수용하는 등 적극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영남권, 제주지역 항공수요 증가에 대비한 적기 시설 확충을 통한 이용객 편의 증진,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항공산업 발전에 기여

◆ 성과목표 3. 교통비를 절감하고 교통서비스 품질을 향상시킨다.

1

수요자 중심의 교통정책 수립을 위한 기반 마련

보통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광역교통청 협의회 운영) 광역교통청 설립 방향 수립을 위하여 교통·법·조직 전문가가 참여하는 TF 구성·운영(17.8~)
  - 관계기관별 협의 전략을 수립하여 토론회, 협의체 및 개별면담 등 의견수렴을 적극 추진(17.7~12), 설립 방안을 조기 마련
- (알뜰카드 연구 추진) 알뜰카드 도입전략 마련 연구용역 착수(17.11)
  - 대중교통 활성화, 다양한 정기권 도입, 전국호환교통카드 이용 확대 등 교통비 절감 제도개선 방안 발굴, 지자체 시범사업도 병행추진
- 미세먼지 대책 마련 관계부처 TF 운영(국토·환경·기재·산업부 등, '17.5~)
  - \* TF회의(3회), 실무협의(3회) 통해 前 대책의 미흡점·보완방안 등 논의, 대책안 마련
- 관계부처 합동 「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」을 수립·발표(17.9)
  - '22년까지 국내 배출량 30% 감축 위한 7개 분야·20개 중점과제 선정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대국민 교통 빅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나, 인지도 부족 및 경제·인문 빅데이터 연계 미흡 등으로 이용률 저조
  - 기존 내비게이션 외에, 교통카드·하이패스 등 교통정보, 부동산·금융·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데이터를 연계\*하여 서비스 확대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관계기관 협의회, 의원 면담, 대국민 토론회 등의견수렴을 통해 청 설립 법안 마련·국회심의 추진 알뜰카드 관련 재정부담 우려 제기에 제도개선 추진으로 국정과제 최종 수립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지자체 협업을 통해 청 신설 시 광역급행 교통망 구축, 환승허브 확대, 교통비 절감 등 중점 추진 하여 광역교통 문제 해소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환승시설 사업관리) 대중교통 환승편의 제고를 위한 수원역·오산역 광역환승센터 사업을 준공하고, 울산역 복합환승센터를 승인
- (환승시설 활성화 방안) 교통수요 분석 및 현장 방문 등을 수행하여 중·소규모 환승센터 후보지 발굴 및 제도개선 방안 마련
- (BRT 사업관리) 부산 내성-송정, 수원-구로 등 기존 사업을 차질 없이 관리하고, 부산 내성-서면 신규 사업 착수
- (BRT 종합계획) 대도시권의 효율적인 BRT 구축 및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10년 단위의 'BRT 종합계획('18~27)'을 수립
- (BRT 기술기준) BRT 등급기준을 도입하고, 과도한 의무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BRT 기술기준 개정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환승시설 활성화) 교통카드데이터 분석을 통한 환승수요를 파악하여 환승센터 후보지 발굴 및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나,
  - 타 대도시권에는 교통카드 하차정보가 누락되어 신뢰성 있는 분석에는 한계가 있어 수도권의 중·소규모 환승센터 후보지\*만 분석
  - 향후, 타 대도시권의 중·소규모 환승센터 발굴 뿐만 아니라 수도권에 발굴된 환승센터 개선사업을 적극 추진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사업설명회, 지자체 간담회, 현장조사 등을 통해 환승시설 등 관련 정책에 의견 반영, 이해관계자 설득과 타당성 설명을 통해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 철도와 분리하여 사업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BRT 등급기준 마련 및 종합계획 마련으로 BRT 확대 및 서비스수준 향상, 교통수단간 환승시간 단축 및 이용자 편이 제고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친환경 택시 활성화) 중형택시로 사용가능한 친환경차종을 확대\*하여, 친환경택시는 전년 대비 51.4% 증가('16.12 212대→'17.11 321대)
- (운송비용 개선)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를 전국확대(10.1)
  - 운송비용 전가금지 항목을 기존 4개 → 5개(콜비추가)로 확대(11.8)
- (대중교통 사각지대 해소) '18년부터 확대될 공공형 택시의 전국 확대를 위해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전국 지자체 대상 설명회(9.28)
  - 수요응답형 운송업 범위확대(농어촌→도시)를 위한 법률개정안 통과(12.8)
- (택시 자격유지검사 추진) 고령 기사의 사고빈발에 따라 65세 이상 자격유지검사 도입을 추진(2.3~3.20 입법예고)하여 금년 내 도입 예정
- (택시 과잉공급 해소) 택시 자율감차 설명회·인센티브 배정 등을 통해 전국 택시 881대 감차('15년 187대 → '16년 819대 → '17.12.12, 881대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13인승 승합택시의 군지역 도입(12.6~12.26 입법예고)에 대해 농어촌·마을 버스업계는 업역침해를 이유로 강력하게 반발
  - 입법예고 기간 중 버스업계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반발을 최소화 하고, 택시업·버스업간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업계, 국회, 지자체 지속 협의·설득, 여론조사 실시 등 협의 노력으로 자격유지검사제, 운송비 전감금지 전국 확대 등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친환경택시는 전년 대비 51.4% 증가, 택시 자율감차 설명회·인센티브 배정 등을 통해 전국 택시 881대 감차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연내착공) 기본·실시설계, 환경영향평가,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서울~세종 고속도로 중 안성~성남은 '17년 착공\*

\* 통상 고속도로 착공에 3년 이상 소요되나, 안성-성남은 2년만에 착공 목표

- 광주시 직동목동 갈등조정협의회, 관계기관 추진협의회를 통해 집단민원과 인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착공기간 단축

- (스마트하이웨이) 스마트톨링, 차세대ITS, 자율주행 기반 등 스마트 하이웨이 개념을 정립하고, 실제 적용하기 위한 세부기술 확정

- 도로 ↔ 차량 역할,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안성~성남 고속도로에 적용할 구체적인 스마트하이웨이 구축방안을 마련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스마트 하이웨이에 대한 교통선진국 사례를 문헌조사 등으로만 분석하다 보니 시의성 있는 방안 마련에 일정한 한계를 노출

- 미국, 독일, 영국, 일본 등 교통선진국 도로기술을 직접 체험하고, 우리나라 여건에 맞도록 국내 도로기술을 개발할 필요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65	환경영향평가 다소 지연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갈등조정협의회 운영, 설명회, 공청회 등 지역주민과 유관기관 설득 노력, 민자업계 면담 등을 통해 민자사업의 재정사업 전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.4	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인허가 일부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서울-세종 고속도로 연내 착공, 스마트 하이웨이 개념을 정립하고 세부기술 확정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차세대 고속철도 구축) 세계 최고 운영속도 400km/h 구현을 목표로 하는 의견 수립(3.3, 12.22) 및 분야별 업무분장(6.30), 설계기준 마련 용역 발주(11.13), 차세대 고속철도 중장기 추진전략(MP)을 수립(12.18)
  - 원칙적으로 대규모 토목공사(고비용)는 배제하고, 궤도, 전력, 신호 등 시설물 개량을 통해 고속철도의 고속화(저비용)를 추진 차세대 고속철도 건설기준 마련
- (기존선 고속화) 일반철도의 속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열차 운영 효율성 향상을 위한 기존선 고속화 마스터 플랜 수립(12.28)
  - 선형개량 등 토목공사(고비용)는 배제하고, 궤도, 전력, 신호 등 시설물 개량을 통한 고속화(저비용) 추진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차세대 고속철도 구축) 400km/h급 고속철도 속도 상승에 따라 기존 자갈궤도 구간 유지보수, 안전 및 소음 등의 문제 발생
  - (자갈궤도) 유지보수 증가, 자갈비산 등을 감안시 속도 향상은 320km/h까지로 속도 제한, 자갈궤도 개량 보강기술('19년 R&D)을 통해 350km/h까지 속도 향상 추진
  - (소음) 기존 방음벽은 350km/h에 맞춰 방음벽을 설치 운영중이나, 400km/h급 속도 상승시 소음 저감 대책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	'철도 건설기준에 관한 규정' 개정, 차세대 고속철도 분야별 추진로드맵 마련 지연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철도국, 철도연, 국회 논의 및 관계부처, 연구소, 기관 등 수차례 의견 수렴전문가 자문회의 및 설명회 개최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	철도의 건설 및 운영 관련 제반기준 완화를 위한 개정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철도 운영속도 상향(300km/h→400km/h) 및 운영 패턴 다양화(정차역 최소화)로 이동시간 , 일반철도 고속화로 고속서비스 수혜지역 확대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세계항공시장 변화에 대응한 '17년도 항공회담 추진전략(2.7)하에서 각국과의 협상에서 국익 극대화\*를 위한 최상의 협상전략 도모

\* 항공수요, 국민 여행편의, 항공사·공항 경쟁력, 외교·정세 등 종합고려

- 5년만의 러시아 항공회담을 통해 그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해온 러측을 설득, 국적사 숙원사업인 시베리아 영공통과권(TSR)을 9년만에 증대\*

- 지방공항 취항독려 및 항공회담을 통한 국제노선 다변화 기반을 지속 마련한 결과 대구·청주 등 지방공항에 '17년 16개 신규노선\* 개설

\* 이스타 청주-방콕, 티웨이 대구-다낭, 에어부산 김해-타이베이, 진에어 부산-우시 등

-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행사 지원 등을 위해 국내전용 지방공항에도 제한적으로 국제선 부정기편을 허용하는 처리지침 마련(10.30)

\* 개항되지 않은 국내공항에서 국제선 부정기편을 운항함에 있어 공항시설, 운항안전, CIQ(세관·출입국 관리 처리·검역), 여타 지방국제공항 영향 등 고려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대한항공-델타 조인트벤처 연내 인가를 위하여 인가기준 마련, 항공사 설명회, 공청회 등을 실시했으나, 공정위 협의 절차 진행중인 상황

- 지속적인 공정위 실무자 면담을 통해 관련 절차 완료토록 노력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항공사 간담회, 임원진 면담,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 현장의견 수렴, 사드로 인한 중국측 항공 분야 제재 조치에 대응하여 노선다변화 등 적기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시베리아 영공통과권 증대, 지방공항 신규노선 개설 등으로 국정사 운항비용 절감, 지방공항 활성화 기대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인천공항 셀프 수하물처리 도입) 항공사 직원이 발행하던 위탁 수하물 꼬리표(tag)를 승객이 직접 발행\*(출력)→부착한 후 전용카운터(유인)·셀프백드랍(무인)에서 위탁 처리로 승객편의 제공

\* (발행방식) ① 공항내 키오스크에서 출력 ② 집·호텔 등에서 종이로 출력



\* 승객 1인당 수하물 처리시간 115초→85초로 단축효과 확인(IATA, 싱가포르 창이공항)

- (위탁수하물 원스톱 처리) 수하물 수속시간 단축 등을 위해 미국 공항에서 출발한 인천공항 환적수하물의 검색 면제 공항 확대로 위탁수하물 처리시간 감소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셀프 수하물처리 시스템을 전국 공항으로 확대하여, 인천공항이 아닌 공항을 이용하는 승객에게도 해당 서비스 제공할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공항공사·항공사 등 이해관계자 대상으로 셀프체크인 도입 필요성, 기대효과 등을 설명하고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도입장벽 해소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승객이 직접 위탁수하물 꼬리표를 인쇄·부착할 수 있어 항공기 탑승전 수속과정에서 승객 대기시간 단축에 기여, 위탁수하물 재검색 면제 적용 대폭 확대(58→83%)

◆ 성과목표 3. 선진국 수준의 교통안전을 달성한다.

1

철도인프라 안전관리 고도화

보통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한국형 신호통신시스템 개발 및 중장기 구축방안 마련('17.12)
  - 한국형 신호통신시스템 안전성 인증 설계, 제작, 현장시험(~'17.12) 및 사용자 검증(~'18), 차세대 신호시스템 연구개발 착수('18)
  - 노선간 상호운전성 확보를 위한 기술기준 및 인증체계 마련('17.12)
- 중장기 철도시설 개량투자계획('18~'22) 수립('17.12)
  - 철도시설 성능평가 기준을 마련하고, 이에 따라 국가철도와 도시철도에 대한 성능평가를 최초로 실시(~'17.10)
- 성능기반 유지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「철도안전법」 개정('17.9~)
  - 시설관리자가 성능평가를 실시하고, 그 결과에 따라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철도건설법\* 개정('17.12, 상임위 통과)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신호통신시스템은 철도운행 안전에 직결되는 시스템이므로 충분한 검증을 통해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인한 후 적용할 필요
- 노후시설 개량예산을 지속 늘리고 있으나, 여전히 시설노후율\*이 38%에 이르는 등 노후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어, 개량투자의 지속 확대와 함께 과학적·체계적 시설관리체계 구축이 필요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관계기관 협의체 운영(10여회 이상), 관계자 설명회·워크숍을 통해 공감대 형성, 노후 도시 철도 안전확보를 위한 국가 역할 강화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노후 철도시설 안전 개선 기대, 철도시설 선제적 예방적 관리 체계 마련
3-3. 정책만족도		4.7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## &lt;빅데이터 기반 안전관리&gt;

- 빅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체계 구축 로드맵을 연내 마련(~'17.12) 하기 위해 관련 법령개선 사항 발굴, 해외사례 연구 등 추진
  - 사고·준사고·안전장애 등 우리부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데이터를 활용하여 「'17년도 국가항공안전 목표」를 수립('17.2)
  - 항공안전 국제동향 조사 및 현안공유·논의를 위해 「북아시아 안전협의체 운영위원회('17.5)」 및 「국제 비행안전세미나('17.11)」 개최

## &lt;전통적 안전관리 고도화&gt;

- 운항, 정비, 관제 등 안전분야의 5개년 미래계획 및 국가안전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항공안전정책기본계획 마련('17.12)
- 민·관 합동 항공사고 위기 대응 종합훈련 실시를 위한 세부일정 마련('17.7) 및 현장훈련 실시('17.10)
- 항공안전 도모를 위해 ICAO와 협업하여 북아시아 안전협력체 운영위원회('17.5)·국제비행안전세미나 개최('17.11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기업비밀 유출, 처분 등으로 빅데이터 안전정책에 다소 소극적인 항공업계의 참여를 유도코자 TF운영 등으로 문제점 해소 방안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워크숍 및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전문가의견 수렴 등 평이한 수준의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데이터 기반 항공안전관리에 대한 항공업계 이해의 폭을 넓혀 국적항공사의 안전관리기법 성숙화에 기여하여 2년 연속 무사고 달성
3-3. 정책만족도		4.63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'17.11월 기준 사망자 수는 3,805명(잠정)으로 최근 38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많은 감소폭 기록
- 특히, 경부 고속도로 광역버스 추돌사고(7월, 사망 2명)을 계기로 '사업용 차량 졸음운전 방지대책'을 수립
- 대형 사업용 차량\*에 첨단안전장치 장착 의무화를 위한 교통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(7월)
  - \* 길이 11m 초과 승합차량, 총중량 20톤 초과 화물·특수차량
- 교통안전 취약 지자체\* 대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지역별 맞춤형 안전대책 수립 지원(경기 광주, 강원 영월, 경북 경주, 광주 서구)
- '22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('18~'22) 수립 중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범정부 교통안전 종합대책('18~'22) 수립·추진을 위해 국무총리가 중심이 되는 범정부 교통안전 추진체계 구축 필요
  - 국가교통안전위원회(위원장 : 국무총리) 및 실무 전담조직 등 각 기관 정책의 총괄·조정을 위한 컨트롤 타워 강화 추진
- 지자체 중심의 교통안전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지자체 안전평가 지표 개선 등 평가체계 개선과 인센티브 제공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정책 토론회 개최, 업계 의견 수렴 등 현장의견 수렴, 줄음운전 방지대책 관련 예산확보 위해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'17.11월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3,805명(잠정)으로 최근 38년간 최저 수준을 기록한 지난해보다도 많은 감소폭 기록했으며, 자동차 1만대당 사망자 수는 약 1.49명(자동차 대수 약 2,553만대 추정)
3-3. 정책만족도		4.72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주차구획) 협소한 주차단위구획의 최소크기 기준 개선을 위한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'문 콧' 사고 예방 및 주차편의 제고
  - 주민들간 주차분쟁 및 갈등 완화 및 주차사고 절감편익·주차시간 절감편익·에너지 절감편익 등 다양한 사회적 편익 발생 기대
- (기계식주차장 안전)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기계식 주차장 이용자의 생명·재산 보호 및 제작사 등 관련 산업도 육성
  - 기계식주차장치 조작미숙, 오작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배치된 주차장치관리인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육제도 도입
  - 10년 이상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 전수검사를 실시하고, 구조물 안전성 및 제어프로그램 오류 검사 등 정밀안전검사제도 도입
  - 기계식주차장 사고발생 시 보고체계 마련 및 사고의 원인조사·분석을 통한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사고조사제도 도입 추진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주차장 이용자와 건물소유주 등 설치자 간에 의견대립이 예상되는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도개선 사항으로 심도있는 의견수렴 필요
- 주차단위구획 확대에 따라 기추진 중인 건축 사업들의 피해 및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 노력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“주차장 설치기준 개선 등 연구”(16.4)에서 설계 전문가 및 지자체 의견 수렴을 통한 합리적 기준을 마련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차량제한 변화에 비해 협소한 주차단위구획의 기준 개선을 통해 주차차량 간 훼손(문콕) 예방 및 주차편의 제고
3-3. 정책만족도		4.74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첨단 안전장치 장착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 및 자동차 보험제도 개선 추진
  - 첨단 안전장치 장착차량에 대한 사고 감소효과 분석 및 보험료 할인을 추진하여 첨단 안전장치 장착 확대 유도
  - 자율주행차 상용화에 대비하여 사고 책임소재 분쟁 해소와 피해자 보호를 위한 보험제도 개선안 마련
- 버스 등 사업용 차량의 교통사고 발생을 감소시키고 원활한 교통사고 보상처리를 위한 자동차 공제조합 관리 강화
  - 전세버스 보험료(공제료) 단체할증 강화(30%→50%) 및 화물차량 단체할증 도입으로 대형 사업용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감소 유도
  - 사업용 차량의 사고 보상을 담당하는 자동차 공제조합에 대한 경영평가, 결산회계감사 등을 도입하여 대국민 보상서비스 향상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첨단 안전장치 장착 차량에 대한 보험료 할인상품 확대를 위해서는 영업용 차량에 대한 분석과 장착여부 확인 시스템 필요
  - 첨단안전장치 장착 여부를 소비자와 보험사가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의 조회시스템 구축 필요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5	사고회사 보험료 단체할증 공제약관 개정 권고 다소 지연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보험료 할인 관련 유관기관(금융위 및 보험사, 공제조합, 보험개발원 등) 회의 개최 등을 통해 첨단 안전장치 장착에 따른 직접적 효과(교통사고 예방, 사망자 감소, 보험료 지급 감소)와 보험상품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혜택을 설명·정책 참여 유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보험료 절감 등 관련 소비자 혜택 증가, 공제조합 투명성 및 재무건전성 확보 기대 등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스마트 철도안전기술 아이디어 공모전(9.25~10.23), TF회의(2회), 워크숍(10.26) 등을 거쳐 「스마트 철도안전시스템 구축 기본계획」을 마련('17.12)
- 노사정 간담회 등을 통해 철도현장(선로·입환·스크린도어) 작업자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위한 철도현장 작업자 안전대책을 마련('17.8)
- 철도운영자의 매월 위험요인별 사고·장애 현황을 인터넷(철도안전 종합포털)을 통해 공유하는 철도안전 Big Board 시범운영('17.6)
  - \* 사고·장애의 원인별로 위험■, 경계■, 관심■으로 표기
- 철도 위험도 평가 매뉴얼을 마련('17.12)하여 운영자에게 보급함으로써 사고·장애 위험요인의 사전분석을 통해 적기에 안전대책을 수립·시행
- 철도보안정보센터(RSC)\*를 구축('17.5)하여 방범용 CCTV를 통한 위험정보 수집·분석, 관계기관 정보공유를 통해 철도테러·범죄를 사전에 예방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전체 철도안전 지표는 유럽의 철도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, 작업자 사상사고는 하위 수준으로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

\* 1억 km 당 주요 철도사고(건, '15년): (韓) 7.2, (英) 1.6, (佛)17.6, (獨)10.9, (伊) 8.2

\*\* 1억 km 당 작업자 사망(명, '15년): (韓) 3.6, (英) 0.0, (佛) 0.4, (獨) 1.1, (伊) 0.0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간담회, T/F구성·운영, 자문회의 및 워크숍,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정책에 반영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철도사고 사망자(1억km당) 및 철도사고(1억km당) 지속적으로 감소 '17.10월 기준 철도사고 사망자수(1억km)는 20.4명으로 전년동기(27.7명) 대비 26.4% 감소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부품개발 마스터플랜 수립) 철도차량·부품의 체계적인 개발 및 부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('20~'27) 전략 마련('17.12)
  - 철도차량부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술 자립화, 해외시장 진출 및 선점, 미래수요 기반의 기술개발 등 부품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 수립
- (인증제도 개선) 철도차량·용품 인증제도 개선방안 마련('17.7)
  - 표준규격 및 인증기준 국제화, 국제 상호인증 지원 및 선진인증 시스템 구축 등 철도산업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 마련
- (After market 조성) 개조 차량에 대한 안전성 검증 확보를 위한 철도차량 개조 제도화('17.10)
  - 철도차량정비기술자·정비조직인증제를 도입하여 철도차량 정비의 품질 강화 및 철도 운행장애·사고 예방
  - \* '17.10월 최인호 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토위 통과하여 법사위 소위 계류 중
  - 핵심부품 지정 확대, 고장 빈발부품 관리 등 국가차원의 부품관리 지침을 제시하는 주요부품 관리 개선방안 방침('17.8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변화하는 국제시장에 대응하고 국내철도차량·부품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은 물론, 철도 운행의 안전을 고도화하기 위해 부품 관리의 선진화 및 강소기업 지원 등 집중 추진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산학연 협의회, 전문가 자문 등 다양한 의견수렴 추진, 제작사 등 이해관계인 대상 간담회(3.31) 및 공청회(8.31) 개최를 통해 업계 우려사항을 해소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부품개발 마스터플랜 수립과 인증제도 개선으로 국가관리 기능 강화, 차량개조 승인에 대한 근거 법률 마련으로 After Market 조성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(안전지표) 국가안전목표 의거 국가와 9개 국적항공사가 공통으로 안전지표\*를 관리 할 수 있는 성과지표 및 고유지표 설정·관리('17.4)

\* (운항분야) 운항제어손실, 유도로 이탈(오진입), 기내화재 등 3개

- (안전투자) 국적사의 안전투자 계획 및 결과 분석('16~'17)을 통한 모니터링 결과는 매출액 대비 안전부분에 적합한 투자\* 실시('17.3)

\* 전항공사는 영업이익 대비 평균 352억을 안전부분에 투자

- (종합점검) 제주항공(LCC)의 종합점검 결과 각종 안전관리시스템\* 도입, 자체 훈련센터 확보('17.3) 등 안전체계는 법적 안전기준 충족('17.5)

\* J-PAGE('14.1, 참고 노선절차), PDC Crew Sys.('15.11, 승무원 자격관리), e-Manual(전자교범, '16.7), EFB Sys.(전자비행정보, '17.6) 등

- (심사이관) 조종사에 대한 정부 직접심사를 축소하고 지도·감독 체제로 전환하여 항공사 자체 안전관리능력 제고를 위한 심사 이관('17.3~)

\*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'기장 인정심사'를 항공사에 단계적 이관

#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LCC의 외형적 성장에 따라 운항규모에 걸맞는 자체 안전관리 체계·역량 확보를 위해 독자적으로 확보가 어려운 인프라\* 지원 필요

\* 조종인력 양성, 항공종사자 훈련 프로그램, LCC 전용 정비격납고 등

- 항공산업 성장으로 항공사, 항공종사자 등 감독 대상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감독인력도 비례하여 증원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낮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간담회, 협의체 운영,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, 제도개선과 점검강화로 원활한 정책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국적항공사 무사망사고 유지(4년), 항공사별 운항규모 확대에 걸맞는 인력·장비·시스템 구축 등 자체 안전관리를 강화하여 대국민 신뢰도 제고 및 서비스 향상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국제기구(ICAO)에서 새롭게 권고한 필수이행과제 반영 등 효율적인 항공교통시스템 발전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계획 보완
  - 조종사, 관제사 등 항공종사자에게 필수적인 항공정보간행물, 항공고시보, 공항주변 장애물 등 항공정보를 실시간 웹서비스로 제공
  - 인천공항의 지연감소 등을 위해 항공교통통제센터와 인천공항 협력시스템(A-CDM)간 연계하여 운영 효율성 극대화
- 국내 항공교통업무를 총괄하는 「항공교통본부」 조직을 신설하고, 항공교통통제센터와 제2항공교통센터 구축을 완료 및 운영 개시

#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ICAO의 항공교통 선진화 계획(ASBU\*)이 개정되면서 새롭게 권고한 필수이행과제 반영 등 국내 기본계획을 일부 보완하였으나,
  - 중장기적으로 항공교통체계의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효과 및 비용 등을 고려한 추진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적으로 추진 필요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낮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5	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산학연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, 업계 세미나 등을 통해 현장의견 수렴,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방부(공군), 항공기상청 근무요원을 지원 받아 24시간 합동근무 협업체계 구축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	차세대 항공교통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미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항공기 이착륙 순서를 최적의 상태로 조정하여 승객들의 불편 감소, 불필요한 지상 엔진가동과 공중체공에 따른 연료 및 탄소배출도 줄일 수 있어 상당한 경제적·환경적 이익도 기대

**【전략목표 IV】 일자리를 창출하고 고부가가치 미래신산업을 육성한다.**

**◆ 성과목표 1. 국토교통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한다.**

1

수자원산업 지원체계 구축

다소 미흡

### (1) 평가결과

#### □ 주요성과

- (물 산업 해외진출 지원전략 수립) 기후변화와 4차혁명 등에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물 산업 육성을 위해 해외진출 지원체계 마련
- (대산산단 해수담수화 선도사업) 대산산단은 '20년부터 물 부족 발생이 예상되고 있어 금년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위해 적극 대응
- (ODA 예산 확보) 유네스코와 공동으로 개도국 물 안보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국제개발협력(ODA) 예산 확보를 추진하여 '국제개발협력 심의위원회(국무조정실)' 의결 통과('17.6월)
- (물 관련 KS 주도 및 표준화 전략 수립) 우리 물 관리 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정립하고 이를 통해 안정적 해외진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관련 KS를 우리 부 주도로 전환 및 표준화 전략 수립

##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대산산단 해수담수화 선도사업) 예비타당성조사 자료수집 및 데이터 분석방법 선정 시 적극적인 초기 대응 필요
- (국내 물 산업 현황 분석) 관련 협회(하천협회, 상하수도협회 등)와의 합동 검토를 통해 일반적 물 기업 동향도 보완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물기업 현황 분석, 분야별 간담회,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견수렴, 해수담수화 예타 관련 KDI의 이견에 적극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해외진출 판로를 위한 사업추진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 하고, 공공 플랫폼을 통해 기술인증 및 민·관 동반진출 지원
3-3. 정책만족도		4.39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「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」을 제정·공포('17.12.19)하여 체계적인 육성·지원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마련
  - \* 진흥 계획, 실태조사, 전문인력, 정보공개, 우수서비스 인증, 창업지원 등
- 국민들의 생활 불편 등을 해소하고 서비스 다변화, 품질 제고를 위한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실시('17.12.)
- 종사자의 자긍심 고취 및 윤리의식 향상 등을 위하여 산·학·연·관이 모두 참여하는 제2회 '부동산산업의 날' 행사 개최('17.11)
  - 윤리헌장 선포, 고용 촉진을 위한 잡페어(100여개 기업) 개최, 서비스 혁신 확산을 위한 우수 논문 경진대회 및 종합컨퍼런스 개최
- 부동산 산업 선진화 및 산업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'부동산 시장 투명성'(글로벌 부동산기업 JLL 발표) 제고방안 마련·추진('17.12)
  - \* 투명성지수(109개국) :영국(1위), 일본(19위), 멕시코(32위), 태국(38위), 한국(40위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국내에서는 부동산 산업 분야 중소기업에 대한 차별적 지원 법령(중기부 등) 등으로 인하여 창업 및 성장에 애로
  -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서비스 개선 혜택이 생활불편 개선과 연결되므로 적극적인 개정 추진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학계, 업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'워킹그룹'을 구성·운영하여 법안·발전방안에 대한 의견수렴, 성공적인 제도 도입을 위해 예비인증 기업 등과 지속적인 의견 교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 정책 수립 및 집행을 위한 법적 기반 마련, 다양한 부동산 서비스 상품 개발 등으로 고부가가치화 도모
3-3. 정책만족도		4.29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1인 주식소유 한도 완화 및 상장리츠 특별 관계자 거래 완화를 위한 법률개정, 상장절차 완화\* 및 공모의무 강화 등 제도 개선

\* 비개발·위탁관리형리츠에 대해 예비심사 생략('17.10 가계부채 대책)

- 이를 통해 리츠 총자산 30조원 달성(11월말 기준) 등 가시적 성과

- 공공리츠 사업모델 발굴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정례회의 등을 통해 리츠 공모상장 활성화 및 공공리츠 추진전략 마련\*('17.11)

\* 시장규모 확대('22년까지 전체 리츠 60조원, 공모·상장리츠 20조원)를 목표로 공모면제요건 축소, 상장제도 개선, 공공자산리츠·공공정책리츠 등 추진

- 투자정보 공개 확대 및 리츠 건전성 강화를 위한 리츠정보 시스템 개선 완료('17.6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공공리츠) 주택·오피스 일변도에서 도시재생, 인프라 등 공공자산으로 투자자산을 다각화하려는 공감대가 점차 확산

- 향후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업 모델 발굴과 교통인프라 등 투자자산 확대 필요

- (공모상장) 연기금·공제 등 사모위주 투자시장이 형성되어 있고, 공모·상장에 대해 자산관리회사 등 리츠 참여자의 의지 부족

- 사모리츠를 병합하여 대형 상장리츠를 유도하기 위한 세제지원과 리츠에 대한 투자자의 인식을 개선하는 정책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85	리츠 주주총회 결의 사항 명확화 과정상 일부 계획 지연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업계 및 전문가 자문, 민관 협의체 구성 등 의견 수렴, 업계 우려에 대해 대안 제시하여 관련법 개정 정상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리츠규모 성장(30조원, '17.10기준), 공공임대리츠 및 기업형임대주택리츠 인가를 통해 주거안정에도 기여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## ○ 시장구조 개선

- 중소형법인의 진입제한으로 작용한 공시업무 참여요건과 대형법인 요건을 완화하여 시장 내 공정경쟁이 촉진되도록 개선

\*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기준 개정('17.8.)

- 수수료·품질 경쟁을 강화하여 국민에게 '양질의', '다양한' 감정평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감정평가 수수료 개편 방향을 설정\*

## ○ 공정 거래환경 조성

- 지자체·공공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(총 7회, '17.4.~7.), 한국농어촌공사 용지매수보상시스템과 추천시스템 연계('17.11.) 등 감정평가 추천제 활성화

## ○ 감정평가사 증장기 수급조절 등

- 감정평가사 증장기 수급 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('17.6~) 결과를 반영, '18년 감정평가사 최소합격인원 결정('17년 150명 → '18년 170명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공정하고 경쟁력 있는 감정평가 시장을 형성하기 위하여 수수료 체계 개선, 감정평가사 증장기수급 계획 마련이 필요
- 지자체,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금융기관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제를 활용하도록 유도할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28	감정평가업자 선정기준 개정 지연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설문조사, 관계기관 TF, 업계 및 전문가 의견청취 등 소통활동 추진, 업계 적극 설득을 통한 제도 개선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감정평가시장 구조 개선, 추천제 활용 증대 등으로 공정 거래환경 조성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## ○ 공공택지 시장의 안정적 관리

- DB연계를 통한 지구지정~주택준공까지의 통합정보 구축·제공(택지 정보시스템, 6월), 택지공급 동향 분석(7월) 등 모니터링 강화
- 택지수급전망 분석(3월), 택지소요량 정밀연구·검토('6~12월)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택지매각계획을 수립(연평균 8.5만호)하여 「주거 복지 로드맵」에 반영(11월)하는 등 안정적인 택지공급체계 마련

## ○ 택지개발제도 개선

- 지형도면 고시절차 명시, 시설부담금 산정기준 마련, 준공 후 지구단위 계획 변경제한 완화를 통해 제도 미비점 보완(택지개발촉진법령 개정, 12월)

## ○ 신도시 개발·관리 연계방안 수립·보고

- 주차난 해소,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준공 후에도 신도시 관리, 부동산 보유·운영을 통한 수익의 지역환원 등 택지개발의 새로운 방향 제시(12월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택지정보시스템 상 구축DB의 오류, 누락사항 등을 보완하여 택지 정보시스템의 신뢰도 향상 지속 추진 필요
- 신도시 개발·관리 연계방안의 법적·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시범 사업 발굴하여 신도시 관리사업의 본격 추진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자체, 주민 등 의견수렴 충실, 현장점검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단독주택용지 청약 과열 걱정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공공택지 시장 안정적 관리, 택지개발 제도개선으로 신뢰성 제고, 지속가능한 택지개발사업 모델 마련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○ (항공물류) 공항 물류단지 조기 개발을 통해 수출입 물류에 필요한 신규부지 공급시기를 2년 단축하고, 물동량 창출 기반 마련

- 항공사 - 운송사간 공동 파레트 사업 추진, 상용화주제도\* 정비 등을 통해 수출입 화물 처리시간 단축(화물당 2시간)

\* 보안능력이 검증된 화주 화물은 항공사 보안검색 없이 자체 보안검색 허용

- 인천공항 국제항공 물동량도 역대 최고치 갱신

\* '13년 246만톤, '14년 256만톤, '15년 260만톤, '16년 271만톤, '17년 280만톤(추정)

○ (항공금융) 항공사의 항공기 도입 비용을 감소시키고 항공기 관련 금융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항공기 리스업 제도기반 마련

○ (항공운송) 항공기 운항 프로세스 개선 및 분기별 지연율 공표 등 지연개선대책을 지속 추진하여 '16년 지연율 대비 32% 감소

\* (지연율, 국내+국제) '15년 7.7% → '16년 13.3% → '17년 약 9.1%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○ 물류 경쟁력 강화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해야 하며, 향후 여건 변화시 추가과제 발굴 및 추진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항공물류 업계와 정기 간담회 개최, 항공사·공항공사가 참여하는 TF운영 등 의견수렴, 제주공항의 가용 슬롯(사드로 인한 중국편 감소분)을 활용하여 특정시간대 집중된 스케줄을 분산배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항공화물 역대 최고치 달성(작년대비 10%↑ 전망), '17년 국내선 지연율은 '16년 대비 35% 이상 감소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헬기 인증관리) 민군겸용 헬기 국산화에 따른 주요 부품 인증 관리를 위한 형식증명위원회를 구성('17.1)하고 인증로드맵\*을 마련('17.5)
  - \* '17(제작합치성 검사), '18(적합성검사), '19(부품장착시험), '20(헬기비행시험), '21(인증완료)
  - 구성품 도면 1,214개중 849개 승인(70%), 규격서 717개중 713개 승인(99%) 및 구성품 합치성검사를 수행중으로 전체 공정률 약 25% 달성
- (인증인력·예산 확보) 헬기 인증인력은 계획된 10명보다 많은 12명을 신규채용, 1차년도 인증예산 11억원도 확보하여 차질 없는 인증추진
- (해외협정 추진) 유럽 에어버스 헬기(EC155B1)를 기반으로 국내에서 제작된 헬기\*를 유럽에 수출할 수 있도록 인증분야 업무약정 추진('17.5/9월)
  - \* 유럽 에어버스 원형헬기(EC155B1) 기반으로 국산 구성품 61종 장착
- (제한형식증명제도 신설) 산불진화 등 특정업무용 항공기는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안전기준을 선택하여 증명 받을 수 있도록 함
  - 항공안전법 개정안 국회제출('17.9.1), 국회 본회의 통과('17.12.8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민군 겸용헬기 국산화 국책사업에 따라 '21년까지 민수헬기 개발이 차질 없도록 중간 형식증명위원회 등을 통한 지속적인 관리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안전성 인증 신청자와 정부간 이견 집중 관리, 여건을 고려하여 군용 수리온 헬기 제한형식 증명제 도입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민군겸용 헬기 개발 국책사업 관련 주요 부품의 차질 없는 인증 추진으로 항공기 개발 수요 확산 효과 기대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제도개편) 지적확정측량 민간이양과 기술심사 기능도입을 골자로 하는 「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 등 제도개편안 추진
  - 기술심사 의무화, LX공사에 기술심사 기능 및 책임 부여 등
- (법률개정) 지적확정측량 민간이양과 기술심사 기능도입 및 수수료 부과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법률안 발의
  -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용어의 정의를 신설(안 제2조제4의3호 신설)
  - 한국국토정보공사(LX)의 지적확정측량 배제 및 참여가 없을 경우 LX에 지적확정측량을 의뢰 할 수 있는 근거 마련(제24조제1항 및 제2항)
  - 민간 개방이후 측량성과의 불안정성 해소 및 사후 책임배상 문제 등 보완을 위한 기술심사 도입(안 제24조의2제1항 및 제2항 신설)
  - 지적확정측량 기술심사 수수료 고시 일 명문화(안 제106조제3항 및 제4항)
- (수행자 선정기준)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 등의 따라 발주하는 지적확정측량의 수행자 선정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기술심사 도입) 민간이양에 따른 기술심사제도는 협회 등의 반대로 법률 개정의 어려움 예상,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공론화 과정 필요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05	공간정보구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등 일정 지연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간담회 개최, 만족도 조사 실시 등 의견수렴,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개정안 법률의 입법방식 전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19.05	만족도 조사결과 목표치 소폭 미달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지적확정측량 민간시장 활성화 및 국민소유권 보호 기대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LX공사의 공적기능 강화를 통해 지적재조사 재원다각화, 사업기간 단축 등 효율적 추진 방안 마련
  - 지적재조사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LX공사와의 협력 강화를 통한 민간업체의 지적재조사 참여 확대 방안 마련
    - \*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T/F 운영 및 토론회(8.31) 개최 등 전문가 의견수렴
- 지적재조사의 안정적 운영과 민원해결, 실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지자체담당자 및 지적측량수행자를 대상으로 전문교육 실시
- 지적재조사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신기술 연구개발 및 정책·제도 지원 등을 위해 LX공사 공간정보연구원에 센터 설립
- 지적재조사 추진현황 분석 및 제2차 지적재조사사업 기본계획상의 목표 달성을 위한 인력양성 방안 제시(과정평가형 자격 도입 등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지적재조사 추진체계 개선에 따른 일자리 창출과 연계 필요
  - LX공사의 공적기능 강화 및 민간업체 사업 참여 활성화 방안에 따라 실질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 등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수요조사, 현장방문, 워크숍과 토론회 개최 등의견수렴,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한 방안 추가 마련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핵심 R&D 발굴을 통한 신기술 개발, 한국형 지적재조사 해외 진출 등 연구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지적재조사 지속 추진

◆ 성과목표 2. 생활공간 속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한다.

1

국토교통 분야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 수립·추진

보통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4차 산업혁명 'TF 구성' 등 대응체계를 구축하고, 민간 중심 **발전 포럼\***을 통해 「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」 수립·발표(17.4)

\* AI, 빅데이터 등 핵심 분야별 50여명의 산학연 전문가 회의(1차관 주재, 총6회)

- 국토교통 분야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, 공공서비스 혁신, 스마트 국토 조성, 혁신기반 조성을 **4대 중점 추진과제로 선정**

- 일몰제 도입 등에 대비하여 R&D 사업추진 효율화 및 질적 성과 제고를 위한 **사업·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및 과제조정 실시**

- 우리부 정책방향에 맞춰 중점 개발 기술분야를 세부사업으로 기획하고, **전문기관 기능조정\*** 및 **과제 관리방식 다변화\*\*** 추진

\* 기획 및 정책 지원 기능 강화, 신산업 추진단 신설 등

\*\* 기술적으로 유사한 과제를 **패키지화**하여 세부사업으로 구성하고, 세부사업 단위로 기획 및 성과평가 추진

- R&D 사업의 법적기반을 마련하고 국토교통 분야의 중장기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10년 단위의 **제1차 R&D 종합계획 수립 추진**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**주요 정책목표와 부합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기획·발굴에 주력하고,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종합대응 강화 필요**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발주기관 설명회, 기술수요조사, 융복합 포럼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한 의견수렴 및 정책반영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신산업 육성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, 일자리 확대 및 경제 활성화의 기반 조성, 투자 재배분으로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전략적 투자 가능
3-3. 정책만족도		4.5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스마트도시 법령 개정) 신도시 건설의 절차법 중심의 U-City법은 급증하는 스마트시티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에는 한계
  - 스마트시티 조성·관리, 산업활성화 및 해외진출을 위한 법으로 개정
- (추진체계 정비) 부처별로 산발적으로 진행되던 스마트시티 정책을 총괄·조정하기 위한 '범부처 스마트시티 추진단'의 역할을 강화
  - 스마트시티 선도국 도약을 위한 종합적인 추진전략 검토, 핵심사업 진행상황 점검 및 피드백 등을 위한 '스마트시티 특위'를 운영
- (월드 스마트시티 워크) 스마트시티를 주제로, 국내외 전문가·기업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도 참여할 수 있는 국제행사를 개최
  - 월드 스마트시티 워크를 계기로, 국내외적으로 스마트시티 논의를 활성화하고, 스마트시티를 체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
- (월드뱅크 협력사업)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과 개발경험을 신흥국과 공유하기 위한 협력사업을 월드뱅크와 한국이 공동 시행(MOU체결)
- (통합 플랫폼 고도화) 도시 관련 각종 정보시스템을 연계하는 통합 플랫폼 기반의 다양한 연계 서비스 개발·확산(5대 연계 서비스 등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월드 스마트시티 워크 행사에 다양한 계층(전문가, 정책 결정자, 일반 시민 등)이 참여할 수 있도록, 행사 콘텐츠를 다변화할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송도 현장방문, 관련부처, 유관 전문가, 민간기업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소통, 전용 홍보관 설치 등 홍보 강화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스마트시티의 조성, 운영, 산업 육성을 위한 법령으로 신속히 정비, 서울시(25개구청)의 각종 정보시스템연계, 5대 안전망 서비스 제공 등 클라우드 기반의 대규모 광역 도시 안전망 구축
3-3. 정책만족도		4.52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국토부 내 자율주행차 T/F팀을 발족('17.11)하여 자동차, 도로, 공간 정보, 교통 등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기능과 인력을 결집
  - 정책 결정 및 추진과정에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자동차, 통신, 도로 인프라, 교통체계 분야 등의 산·학·연 핵심 전문가로 이루어진 '정책자문단'을 구성·운영중('17.11~)
- 테스트베드 'K-City' 내 5G 통신기반 조성, 자율주행차 지원인프라\* 확대 구축 및 200여개 기관에 정밀도로지도 무상 제공
  - \* (C-ITS) 서울-호법 41km, 여주시험도로 7.7km  
(정밀도로지도) 영동·경부 고속도로, 여의도, 판교, 평창 지역 등 1,351km
- 딥러닝을 통한 자율주행차 기술개발을 지원하여 상용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데이터 공유센터 구축 예산 10억원 확보('18년 신규)

#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자율주행차의 성공적 상용화·확산, 일반국민의 인식·신뢰 등 수용성 제고를 위한 국민체감형 프로젝트 확대 필요
- 전국적으로 자율주행 실증을 하려는 수요가 많아짐에 따라 이에 대응한 스마트인프라(C-ITS, 정밀지도 등) 구축 확대 지원 필요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업계·학계 등 전문가 참여 규제혁신 간담회, 정책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정책 수요자와 지속적 소통하며, 현장중심의 정책과제 발굴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규제 혁신 및 지원 인프라 구축 등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'16년 대비 임시운행허가 취득 차량대수 및 기관수 약 3배로 증가국내 최초 개발·제작한 자율주행셔틀을 일반국민·언론에 공개
3-3. 정책만족도		4.51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○ 드론산업발전 기본계획 마련('17), 비행시험장 등 인프라 구축, 특별승인제 도입, 기술개발, 시범사업, 창업지원(판교 기업지원허브 운영) 등 추진

- 제도마련\*을 통해 그간 금지되던 야간·가시권 밖 비행을 안전기준 충족 시 허용하여 장거리 수송, 야간중계·공연 등의 분야 **사업화 확대**에 기여

\* 야간·가시권 밖 비행 특별승인제 도입·시행(11.10)

- 민관협의체를 운영하여 국내 우수제품 활용 촉진방안 마련 등 논의를 통해 중소기업간 경쟁제품\* 지정 추진으로 **보급 확대**에 기여

\* 국가·공공기관 드론 도입 시 국내 중소기업 생산제품 우선 구매('18.2월 시행)

- 드론 챔피언십 행사, 포럼·워크숍·심포지엄을 통한 **저변 확대**

\* 컨퍼런스(3월), 국토·주택 드론 워크숍(4월), 국제 무인기 워크숍(5월), 정책 포럼(8월, 국회), 드론 챔피언십(9월), 심포지엄(12월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○ 기업 육성을 위한 **기업지원허브** 운영('17.9, 20개사 입주), 시범사업 (23개) 지속 추진하고, 「드론산업 발전 기본계획」 수립('17.11)하여 신산업 육성기반을 마련하였으나,

- 국내 산업이 아직 초기단계로 산업육성을 위한 **지속적인 정책 필요**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간담회, 공청회, 시연회 등 다양한 현장의견 청취 및 정책반영, 정책의 수립, 집행, 사후평가 등의 단계별 홍보 강화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규제완화, 기반조성, 기술개발 및 시범사업 등 종합적인 지원을 통해 국내 드론 운영시장은 전년대비 약 2배 급속도로 성장
3-3. 정책만족도		4.55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공익목적 긴급비행 적용특례\* 도입·시행(11.10) 및 드론 교통관리체계 연구(R&D) 착수 등 운영환경 개선으로 공공수요 활용증대 기여
  - \* 공익목적의 긴급비행의 경우 야간·가시권 밖 비행제한 면제
- 공공기관 운영특례 도입 및 활용 활성화 대비 조종인력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기관 지정요건\*을 명확히 하여 전문교육기관 확대('16:7→'17:22개)
- 드론 기반의 전국단위 하상변동조사 및 하천측량에 대한 체계적인 수행을 위한 기본계획·기준 마련 및 시범사업 추진
- 드론을 활용하여 도로 점용현황, 비탈면·교량 점검, 도로교량(25개소), 도로비탈면(20개소) 점검 완료
- 시범사업을 시행하여 철도시설 점검(비탈사면, 고가교량, 송전탑 등 약 200여개소)에 드론을 활용하고 실효성 분석 및 개선사항을 발굴
- 드론 영상을 활용한 지적재조사측량의 위치 정확도 및 효율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지구 현장측량 검증과 지자체 교육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조사·측량 성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국가차원에서 성과를 검증하는 과정을 마련할 필요(조사·측량 성과 검증기관) \
-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정보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자동으로 정밀분석이 가능한 SW의 개발\*이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
3-3. 정책만족도		4.60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교통서비스 개선) 주말, 명절 등 교통정체시 운전자가 본인에게 가장 적절한 시각과 경로를 선택할 수 있도록 교통예보 확대
  - \* '16.9월부터 우리부에서는 고속도로 우회국도 5개 구간에 대해 예보 시행 중, 교통분산을 유도하여 도로 이용자들의 정시성 확보 지원
- (도심 신호체계 개선) 교통량 기반의 신호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국 46개 지자체의 교통소통 개선 지원
- (감응신호 확대)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소통 증진을 위해 국도 신호교차로에 감응신호시스템 도입(울산, 광양 등 6개노선 64개소)
- (자율주행 기술개발 지원) 자율주행차 산업계·학계에서 기술 및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C-ITS 인프라 등 테스트 환경 제공
  - (시험환경 제공) 대전~세종구간에 이어 여주시험도로, 자율주행 테스트베드(서울~호법)구간에 C-ITS를 구축하고 민간에 제공
  - (시험운영) 테스트베드 구간에서 자율협력주행 시험운영 실시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교통서비스 개선을 위해 감응신호의 확대, 지자체 신호체계 개선 등 관련 과제를 지속 추진 필요
  - 소통용량 증대 등 교통개선 효과가 우수한 신호관련 사업 지원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연구기관 및 민간기업 간담회, 체험행사 등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반영, 자율협력주행의 국제행사를 개최하여 우리기술의 우수성 홍보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감응신호 운영결과, '16년 대비 소통능력 18.4% 증가 및 신호위반 52.7% 감소 등 사업효과 발생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스마트공항) 체계적인 스마트공항 도입을 위한 스마트공항 종합 계획 수립 및 4차산업혁명위원회 안건 상정('17.12.28)
  - 지능형 안내·청소로봇을 시범도입('17.6)하고, 여객의 모국어(한국·일본·중국·영어) 음성인식 및 안내 서비스 도입('17.12) 등 스마트공항 추진 위한 세부 과제 시행
- (비정규직의 정규직화) 기간제·파견 인력 등은 12월말 전환심의 완료(기간제 : 42명중 11명, 파견 : 6명중 4명)
  - 계약만료 및 조기해지 업체 인력의 정규직화를 위해 임시자회사 설립(인천-9.18, 한국-12월말 예정)
    - '18.1.1부로 연내 계약만료/해지 용역업체 인력을 '18.1.1부로 임시자회사 정규직으로 채용(인천 1,004명, 한국 677명)
- (항공여객 편의제고) 항공여객이 공항까지 접근하는 과정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주차장 편의성 제고, 인천공항 제2터미널 원스톱 민·관 서비스센터, ICT 활용 출입국 간소화 기기 설치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비정규직) 전환방안 논의과정에서 정규직 노조와 비정규직 노조(민노총)간 갈등 심화 우려(인천공항공사)
  - '18.1.18일 T2 개항에 지장이 없도록 갈등관리 노력 필요

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전문가 자문, 공청회, 노사전 협의회 등을 통해 현장의견 지속 수렴, 비정규직 전환방안 합의 도출 위해 적극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스마트공항 종합계획 추진에 따라 여객 만족도 증대 및 첨단 공항 이미지 구축18.1.1일부로 약 1,000명(전체 9,988명)의 비정규직 인력이 임시자회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 예정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마스터데이터 후보선정) 국가마스터데이터 지정·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관계부처 T/F 참여 및 시범기관으로 지정(행자부 주관, '17.4~12월)
  - 국토교통 핵심데이터 4종(토지·건축·자동차·시설물)을 후보로 선정 및 데이터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개선방안 도출('18년 시범사업 추진)
- (통계기능 고도화) 이용자의 개발 요구사항 반영,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자 편의 중심으로 시스템 기능 개선
  - G-클라우드 이관, 통계자료 Open Api 서비스 개발, 포털 콘텐츠 기능 개선 등 시스템 기능 고도화로 이용자 편의성 및 활용성 증진
  - \* 개선 후 시스템 이용자 전년대비 약 40% 증가 ('16년 417,619명 ⇒ '17년 582,451명)
- (경진대회) 대학생, 스타트업 등 다수 팀이 참가하여 국토교통 빅데이터 활용 경험 및 인식 개선
  - 해커톤(Hackathon, 무박 2일간) 대회를 최초로 개최하여 총 23개 팀이 참가하여 최우수 '최적화맥스 : 분노의 도로\*' 등 5개 팀 수상
  - \* 인공지능 딥러닝(Deep learning) 기법으로 교통 흐름을 예측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국토교통 빅데이터 전략 마련, 정책 활용 지원체계 구축, 창업 지원 프로그램 연계 등 발전 도모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이용자를 대상으로 데이터 활용 평가 및 불편사항 등 설문조사(온라인) 및 집중 인터뷰(FGI)를 병행 실시, 분석 활용 방안 강구를 위해 부내 “빅데이터진흥팀 신설”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사용자 편의 중심의 통계누리시스템 개선으로 통계 이용·보급 활성화, 국토교통 통계를 기반으로 한 홍보강화 지속 추진으로 우리부의 역할 및 위상 제고

◆ 성과목표 2. 신사업의 핵심기반인 공간정보를 고도화한다.

1

공간정보 인프라 혁신

부진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(로드맵 마련) 공간정보 기술과 미래 유망산업 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기술발전 로드맵 마련
  - 차세대 공간정보 유망산업군 도출 및 유망산업별 공간정보 기술지도 작성
- 기본공간정보\*의 중첩 시 위치불일치, 메타데이터 미흡 등 민간의 활용 불편사항 개선을 위한 생산·유통 서비스 개선
  - 기초 공통데이터인 기본공간정보의 품질이 정확하고 일관성 있게 구축될 수 있도록 데이터모델 표준 및 품질기준 마련
  - 개별 생산기관별로 구축되고 있는 기본공간정보의 품질확보 등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을 위한 품질관리기관 선정 추진
- 내비게이션, 포털 등 위치기반사업자와 엔지니어링, 설계사무소 등 수요자별 사용형태에 따른 차별화된 공간정보 서비스
  - 최신성이 필요한 포털 등에는 도로, 건물 등 변화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\*·제공하여 개별 서비스를 위한 별도 추가조사 부담 해소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기본공간정보의 정확성, 최신성 등 고품질화를 통한 국가 차원의 기초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낮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공청회 개최, 정보산업 주요 관계자 면담, 국가공간정보위 안건 상정 등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미래수요 및 시장전망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간정보 분야 R&D 로드맵 마련을 통해 정부 및 민간 연구개발에 전략적으로 활용
3-3. 정책만족도		4.44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공간빅데이터 플랫폼으로 과적단속 최적위치 선정(기술정책과), 혁신도시 건설지역 활성화 효과 분석(공공기관지방이전추진단) 분석과제 지원
  - 과적차량 이동경로 예측 및 단속업무 지원을 위해 화물차 기록 정보를 분석하여 과적차량의 이동경로 분석 자료 제공
  - 유동인구·카드매출 자료를 활용하여 지역 활성화 정도를 가시적 도출
- (과적단속) 공간빅데이터 분석내용과 단속가능 위치, 교통량, 검차·단속정보를 자체 알고리즘으로 분석하여 시간대별 최적 단속위치 및 지자체와의 협업단속\* 방안 제시
  - (시범 사업) 단속위치 분석내용을 토대로 수원(경기 이남) 및 포항 국토사무소(경북 포항 일대)에 최적 단속위치 시범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, 지자체(경기도)와 합동단속 실시
- (혁신도시)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역활성화 진단 모델 개발
  - 도시 내 공간 활성화 정도, 기종점 자료를 기초로 한 총 인구이동 거리변화 예측, 업종별 카드매출액/건수 기준 지역특화 분석 등

#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국가기관,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는 공간빅데이터 분석 수요를 지속 파악하여 공간분석과 효율적 정책결정 지원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협의회 구성하여 추진현황 공유 및 현안사항 논의, 만족도 조사를 통해 결과 환류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범부처 활용 플랫폼을 구축하고 2건의 정책분석을 지원하여 과학적 행정 및 합리적인 정책결정 지원
3-3. 정책만족도		4.49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#### ○ 창업 생태계 구축 지원

- 우수 공간정보 창업기업 보육을 위해 서울시 창업보유센터협의회장단 (숙명여자대학교 창업보육센터)에 보육 위탁 추진('16년 업무협약)
- 공간정보 창업활성화를 위한 전문기관 간 협의
  - \* K-ICT 빅데이터 센터, 창업진흥원, 한국정보화진흥원, 한화 드림플러스 등
- 공간정보 창업활성화 자문단 운영(연2회, 상·하반기)
  - \* (주요내용) 공간정보 창업정책 발굴, 문제점 및 개선사항 논의 등
  - \* (구성) 주요 7개 분야(법률, 마케팅, 판로, 세무, 엔젤 및 해외진출) 전문가

#### ○ 창업관련 행사운영 및 지원

- (제4회 공간정보 융복합 창업 페스티벌) 공간정보 기반 창업자를 대상으로 융복합 창업 아이템 발굴 및 수익모델 컨설팅 추진(1박2일)
- (제4회 공간정보 창업기업 대상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) 주요 분야 전문가와 기업 간 1:1 컨설팅 기회 제공
- (제5회 공공데이터 활용 창업경진대회) 창의적 아이디어,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을 위해 국토부, 행자부, 중기청 공동 개최('13~)
  - \* 총 1,604개 팀 참가(산업부 등 23개 리그)

#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우수 창업기업 발굴 및 보육 공간 제공을 통한 인큐베이팅을 통해 체계적인 육성 시스템 및 효율성 성과관리 추진 필요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창업 자문단 운영, 창업 페스티벌·경진대회로 수익모델 컨설팅 지원, 신규 비즈니스 모델 발굴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창업 페스티벌, 전문가 컨설팅 분야 확대(7개) 등 공간정보 창업지원으로 예비창업자의 사업화 촉진 기대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공간정보 융·복합 경진대회 개최\*하여 민간의 우수 아이디어를 발굴·육성하고, 공간정보 융·복합 활용 활성화 지원

\* 참가자 모집(5월), 1차·2차 심사(6월), 심사통과자 협약(7.7.) 및 개발환경 지원(7~8월), 경진대회 개최(9월)

- 대학교를 중심으로 지역별 맞춤형 설명회 순회 개최를 통해 정부 정책에 대한 민간 호응을 유도하여 200여명의 참가자 모집
- 경진대회에는 일반인, 대학생, 예비창업자, 민간 기업 등 다양한 인원으로 구성된 참가자 69팀이 지원하여 높은 참여 열기를 보임

- 민간에서 공간정보를 활용해 쉽게 사업화 가능하도록 클라우드 개발환경 시범서비스 및 국가공간정보 클라우드 전환계획 수립

- 클라우드 기반의 개발 인프라 지원과 전문가 T/F 자문 등을 거쳐 「VR을 이용한 3D 건물정보」 등 모바일 시제품 10건 개발에 성공

#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현재는 구체적인 서비스 대상이 확립되지 않은 시범 서비스 계획 단계로 차후 클라우드 센터 구축 등을 통한 차질 없는 추진필요

- 이를 통해 공간정보 클라우드 서비스 수요자가 자신이 개발한 실제 상품을 시장에 선보여 사업화에 성공토록 제반 여건 마련을 추진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협업기관(LX, ETRI), 전문가, 예비창업자 등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계획 보완, 설명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적극 홍보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공간정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하고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관련 산업 성장 기반 마련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韓·佛 공동개발) 선정된 국내 공동개발기관(KT)과 해외협력사(佛 탈레스社) 등을 통해 한국형 SBAS 개발구축을 위한 사업 본격 추진
  - 해외협력사와 공동으로 예비·상세설계를 수행하고 美(공군사령부)와 협력하여 아국의 정지궤도위성 운용에 대한 식별코드 획득 추진
  - SBAS 통합운영국, 위성통신국, 통신네트워크, 위성임차 등 국내 개발장비·소프트웨어 개발기관 선정 및 개발 착수
- (위치선정) 소국토 확장성, 최소 기술적 요구조건, 사이트 접근 및 보안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SBAS 통합운영센터 및 기준국 위치 선정
- (인증추진) 한국형 SBAS 국제적 인증을 위해 유럽항공안전청(EASA)과 인증협력·기술이전교육 계약체결(항공정책실장↔EASA국장, '17.4)
- (국제회의) 아태지역 APEC 교통실무그룹 위성항법회의(GNSS), SBAS 상호운용성 워킹그룹 국제회의 등 참가로 SBAS 구축현황 발표 및 홍보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해외 공동개발에 따른 기술이전 전략 및 국제적인 전문가를 활용한 인증방안을 수립하였으며, 유럽항공안전청 인증협업 지속적 시행
  - (국내규정 보완) 유럽 및 국제표준 기준\*에 맞는 국내규정을 보완·마련 등 KASS 설계·운영 인증분야(기술기준, 심사원 등) 고시 제·개정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전문가 자문,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, 국제회의 개최로 각국의 기술개발현황 및 이슈 공유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향후 정확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실내 위치추적, 빠른 길찾기, 응급구조 등 고부가가치 산업 창출과 일반 생활 전반 서비스가 한 차원 높아질 것으로 예상

**【전략목표 V】 국토교통 산업의 상생·성장기반을 강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.**

**◆ 성과목표 1. 건설산업 문화를 선진화하고 경쟁력을 제고한다.**

**1**      **건설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**

**우수**

### (1) 평가결과

#### □ 주요성과

- 저성장,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비하고 건설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혁신하는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및 건설산업진흥기본계획 수립
  - (건설산업 일자리 개선) 건설근로자 임금체불 근절, 사회보장 강화 등 일자리 개선을 위해 중요한 핵심과제\*를 선정하여 대책 마련·발표(12.12)
    - \* 임금보장 강화, 근로환경 개선, 직업전망 확립 등 3대 목표 10개 과제 추진
  - (동향점검 강화) 건설경기 동향 점검을 통해 건설정책 방향을 설정하고, 부실화될 경우 파급효과가 큰 대형 건설사의 특이동향도 파악
  - (통계개선) 동향파악의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통계청 표본조사(상위54%) 한계를 극복한 '건설공사 계약통계' 승인(17.6월) 및 최초 발표(17.9월)
- 발주제도 혁신을 통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기 위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선진 발주제도 시범사업 추진\*
  - \* 순수내역입찰, 시공책임형 CM

#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건설산업 일자리 개선대책은 그간 노동계에서 제기한 의견들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, 향후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96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나 중간과정 일부 지연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발주처, 업계, 전문가 등 TF운영 및 대국민 인식조사 등을 통한 의견수렴 충실, 다양한 채널로 노동계의 의견 수렴 등 건설사업 불공정관행 이슈 적기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선진 발주제도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국내기업의 입찰능력 향상 및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일자리위 및 노동계 위원 대체적으로 노·사간 충분한 협의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낸 우수 성과로 평가
3-3. 정책만족도		4.27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R&D 기획 완료) 스마트 건설기술 자동화(10.13), IoT 기반 유지관리(11.30) 등 2건의 R&D 기획 완료
- (진흥기본계획 수립) 분야별 TF회의를 통해 초안 마련, 관계기관 협의(11.10),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(12.8) 및 최종 방침(장관, 12월말)
- (BIM 시범사업 선정) 설계사·시공사 BIM 교육 실시(6.29), BIM 시범사업\* 선정(7.11), 발주자 실무매뉴얼 보급(11.30)

\* 입장~진천 국도건설(2차로 개량, 5.1km), 포항~안동 1-1 국도건설(4차로 확장, 28.5km)

- (법률 제정안 국회 상정) 법률안 마련을 위한 검토회의, 지자체·국회 협의 등을 거쳐 법률 제정안\* 발의(11.15), 상임위 상정(12.12)

\* 노후기반시설관리기본법 제정안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R&D 기획이 완료되었으므로 '18년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고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'20년에 본사업을 추진할 필요
- 새로이 수립된 제6차 건설기술진흥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일정에 맞게 추진할 필요
- 발의된 법률 제정안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전문가 토론회, 정책세미나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충실, 4차산업 혁명 등 여건변화에 스마트 건설기술 기본 계획 수립 등 적기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AI·ICT 융복합 건설 및 유지관리 기술개발을 통해 SOC 인프라 안전기술 확보 및 건설기술기본진흥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산업의 고부가 일자리 창출, 국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 등 기대
3-3. 정책만족도		4.52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## ○ 골재수급 안정화를 위한 골재원 체계적 관리

- 골재자원조사를 실시하여 골재수급안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고 각 지역에 부존되어 있는 골재물량을 조사하여 수급위기상황에 대처
- 이를 통해, '16년 24.3%이던 전국 바다골재 비중을 '17년 10월 기준 16.4%까지 감축하였고 동남권 바다골재 비중도 57.2%에서 20.7%로 감축
- 국조실, 해수부 등 관계기관 회의를 통해 적극 대응하여 골재원 다변화 계획을 포함한 골재수급안정대책 합동 발표
  - \*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안건 상정 및 발표('17.12.28)
- 바다골재 공급 비중 감축으로 해양환경훼손을 예방하고 바다골재 채취로 인한 어민단체 반발에 대한 해소 기대

## ○ EEZ 골재채취단지 관리자 다변화

- 보다 친환경적인 해양환경관리를 위하여 해양환경관리공단이 골재채취단지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법적근거 마련
  - \*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의3 제2항 개정('17.8.22)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관계부처 합동 골재수급안정대책(12.28)의 세부 추진과제 적극 추진을 통해 골재 수급 안정화 도모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B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보통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민관협의회, 현장방문, 정책설명회 등 의견 수렴 충실, 순환골재 품질기준 등 제도개선 및 골재수급 안정대책 마련 과정에서 업계, 관계기관 의견 적기 반영·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골재수급안정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, 각 지역 부존 골재물량 조사 등을 통해 수급위기상황에 대처하여 전국 바다골재 비중 감소 등 골재수급 안정화 도모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글로벌인프라펀드 조성) 사업발굴·F/S 이후 개발단계에서의 정부 지원을 신설을 위한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신규 조성
  - 해외건설 경쟁력 중 가장 취약한 금융 분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초기 단계(본타당성 조사) 금융 지원 정책 마련
  - 저유가 지속, 중동 리스크 증가 등 불리한 대외환경에도 불구하고 수주 하락세를 저지(244억불 → 272억불, 12.18일 기준, 전년대비 11.5% 증)
    - \* 특히, 우리기업이 참여한 PPP 규모도 확대(1억불 → 15억불, 12.18일 기준)
- (해외건설 지원공사 설립) 새정부 출범 직후 단기간 내 법안을 통과시켜 조기에 해외인프라·도시개발지원공사 설립 기반 마련
- (해외건설산업정보시스템 구축) 근거 법령 마련 및 신규 예산 확보를 통해 정보를 수집·축적, 연계·후속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
  - \* 우리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시 “정보부족”이 가장 주된 애로사항이라고 응답 (해외건설 진흥계획 수립연구, '14.11월, 해건협)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지원공사 설립 기반은 마련하였으나 실질적인 공사설립·운영을 위해서는 면밀한 계획 및 실행이 필요
- GIF, GIVF 등 해외건설 펀드를 마련하였으나 업계 지원확대 요구는 점점 커지는 상황으로 예산 당국과 협의를 통한 지속적인 금융확대 추진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해외건설기업 등 면담·설문조사, 전문가 간담회, TF운영 등 의견수렴 충실, 글로벌인프라벤처펀드 조성 등 해외건설 지원 이슈 적기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해외투자개발사업의 개발비용 지원을 통해 고부가가치 창출 기반 마련, 투자개발사업(PPP) 수단계를 지원할 지원공사를 설립 기반마련으로 민관합동 해외 진출 확대 기반 마련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우리기업 수주선점기반 마련) 총 15개국에 장·차관급 협력대표단을 파견하고 협력국가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한국형 모델 반영 논의
  - 新남방정책, 中일대일로 협력 등 정상외교와 연계, GIF확대조성, 한-중 협의채널 전면 재가동(국토부·유관기관) 등 인프라 협력 조치
- (패키지 진출 확대) 해외 인프라 수주지원 방안을 통한 범정부 지원으로 터키 차낙칼레 대교, 이집트 메트로 등 4건의 프로젝트 수주
  - 정상순방을 계기로 인니 상수도(K-Water), 경전철(철시공), 공공주택(H건설) 등에 대해 발주처와 사업자간 MOU체결로 수주선점
- (강소기업 해외진출 지원) 정상순방과 연계하여 기술력을 축적한 강소기업의 스마트기술 홍보와 발주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로드쇼 개최(11월)
  - G2G기반 사업발굴과 ODA, 정책·기술 컨설팅을 실시하여 엔지니어링社(설계), IT기업(첨단인프라 요소기술), 측량업체(측량DB) 등 강소기업의 사업기회 창출
- (국제정세 대응) 카타르 단교조치 직후 상황반 운영, 관계국 공관(UAE, 쿠웨이트, 사우디)과 실시간 협의채널 구성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 최소화
  - 이라크 모술탈환 가시화 시점에 장관급 협력대표단을 파견, 재건 활동의 핵심 동반자로서 위상을 정립하고 수주가능성 제고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新남방정책의 실현과 중동 중심의 수주시장 다변화를 위해 새로운 전략국가인 아세안 지역 협력강화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8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대부분을 완료하였으나 중간과정 일부 지연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간담회, 협력회의, TF운영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충실, 국가별 상황에 따라 맞춤형 대응전략 수립 및 적기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한국의 경험·기술과 금융역량, 정부협력을 결집한 메가 프로젝트 수주확대 및 중남미·중양아 등 제3국 공동진출 모델을 창출하는 등 신시장 개척, 진출분야 다변화 지원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종합심사낙찰제) TF 운영, 공청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특례기준 승인 및 건설Eng 종합심사낙찰제 시범사업(17건) 발주(17.10)
- (확정가격 최상설계) 김포-과주 고속도로 등 고난이도, 창의성 등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5개 사업을 확정가격 최상설계 시범사업으로 선정
- (불공정 관행 개선) 턴키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전문가TF 운영, 발주기관협의회, 공청회, 간담회를 통해 건설기술진흥업무 운영규정 개정(11월)
  - \* 발주청-시공사, 시공사-설계사간 일괄입찰 불공정한 계약사례 개선을 위한 입찰안내서 내용 개선
  - 턴키 입찰안내서 및 평가 유의사항 전국 발주청 협조 요청(11.10)
  - \* 대표사와 설계 참가자 계약서 제출 등 턴키 불공정 개선을 위한 유의사항 알림
- (제도개선) 턴키 심의위원 정원 확대, 부실심의 예방을 위해 설계분과위원회 최소 구성요건 등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개정(17.12)

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턴키사업에서 발주청-시공사간, 시공사-설계사간 불공정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지속 모니터링을 통하여 발주기관 지도 등 필요
- '18년 제도개선이후 용역 종합심사낙찰제 본격 도입을 위해서는 전국 발주기관에서 업무에 참고할 수 있는 세부기준과 매뉴얼 마련 필요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전문가 TF운영, 업계공청회 등을 의견 수렴 충실, 이의제기 업체 간담회 등을 통해 불공정관행 개선 등 적기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턴키 등 기술형 입찰의 불공정관행을 개선하여 건전한 건설산업 문화 정착 및 기술력 평가 위주의 입낙찰제 도입으로 국내업계의 기술력 강화 및 해외 진출 유도

◆ 성과목표 2. 물류산업의 성장역량을 강화한다.

1

화물운송시장 신산업육성 및 동반성장 기반조성

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- 도로안전운임제(표준운임제)에 대한 시장내 이해관계자 간 첨예한 의견 대립\*을 중재(30회 이상 협의)하고 합의안 마련(11월)

\* (화물연대) 차주의 적정운임 보장을 위한 표준운임제의 전면적 도입 주장 (화주·화물업계) 물류비 상승 등 부작용 우려로 표준운임제 단계적 도입 주장

- 친환경 화물차(수소·전기차)에 대한 신규허가 내용을 담은 「화물자동차법」 개정안 국회 상임위 통과(11.27)

- '17년 중 공영차고지 5개소를 신규 착공하고, 상·하반기 운영·건설 현장 점검(6.3, 12.15)를 통해 사업의 정상 운영 추진

- 정부·민간 합동 사업용 화물차 불법증차 조사 TF 구성·운영

- 조사결과 총 39,939대를 조사하여 불법증차 의심차량 711대(1.78%)에 대해 지자체별로 결과 통보하여 원상회복 등 조치요청

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도로안전운임제에 대한 최종 합의안(「화물자동차법」 개정안)을 마련 하였으나, 법 개정안의 통과를 위해 국회 설명 등 필요

- 공영 차고지 예산은 지특회계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조속한 추진을 위해 중앙-지방 협의회의체를 이용하여 시·도 내 우선순위 설정을 적극 권고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업계, 전문가 등 TF 운영, 차고지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충실, 업계 입장 변화 등에 적기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친환경 화물차 허가제한 규제 철폐를 통해 신규 영업용 차량 공급기반 마련 및 도로안전운임제 합의안 마련으로 영세 화물차주 권리 향상에 기여, 불법증차 의심차량 적발·조치로 화물운송시장 투명성 확보
3-3. 정책만족도		4.44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(신성장 물류산업 생태계 조성) 벤처캐피털과 협업하여 물류 스타트업 투자펀드 조성, 유망 스타트업 발굴·육성 등 물류 혁신창업 활성화
  - 민관 합동 「물류 스타트업 포럼」 결성, 스타트업 맞춤형 창업 프로그램 지원 등 물류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
- (물류분야 청년일자리 창출) 청년 채용박람회 및 채용설명회 개최, 물류전문인력 DB센터 취업매칭 지원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
  - 육·해·공 및 물류유관 분야를 포괄하는 전방위적 물류일자리 매칭의 장 마련으로 채용정보 제공 및 취업성공 노하우, 유망 물류산업 홍보 등
  - 청년 구직자의 높은 관심으로 목표(3,000명)를 상회한 약 3,378명 방문, 현장면접 및 채용상담 3,228건 실시, 실제 기업채용 성과 28명(17.11.30)
- (4차 산업혁명 대응) 산업간 융복합에 의한 신산업 창출 등 최근 물류트렌드를 반영한 물류 ICT 등 융복합형 인재양성 추진
  - 인력양성사업 교육프로그램에 IT, 프로그래밍, 데이터 분석·활용 등 ICT 물류기술 활용능력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지원

### □ 개선보완 필요사항

- 물류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산재된 조직, 지원사업의 연계를 통한 일원화, 유망 스타트업 집중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 필요
- 청년일자리 창출은 물류 및 유관분야를 포괄하는 물류산업 전반의 기업 맞춤형 인재 채용의 場으로 발전시킬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포럼 구성, 간담회,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의견 수렴 충실, 산업간 융복합 추세 등 여건변화에 협업체계 구축, 지원방안 마련 등 적기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투자펀드 등 지원기반 조성,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한 유망 물류 스타트업 육성 등 혁신성장을 위한 창업환경 조성 및 전방위적 물류 일자리 매칭의 장 마련으로 물류분야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 매칭 성과 제고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도시첨단 물류단지) 도시첨단 물류단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세부 시행기준을 마련하여 물류단지 개발지침 전부개정 완료
- (물류창고 첨단화 유도) 첨단물류센터 인증제도 도입 및 인센티브 지원방안을 제3차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에 반영
- (물류단지) 물류단지 연계교통망 확충 및 고유기능 강화를 위해 실수요검증 평가기준 개정 완료('17.9월, 물류시설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)
  - 물류단지 관리주체 명확화, 토지·시설 처분 등에 대한 관리 강화 등 효율적 관리를 위한 물류단지 관리지침 개정 방침('17.12월)
- (R&D) 미래 물류기술 선도와 물류산업 지원 등을 위해 물류 R&D 중장기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기술개발 추진방안 마련
  - 접이식 컨테이너 기술 및 택배차량용 하이브리드 개조 기술 등 신규 연구과제를 추진하여 물류 운송효율화 및 미세먼지 저감 방안 마련
- (정보화) 물류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물류 관련 국내·외 콘텐츠 등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정보화) 시스템 구축을 통해 물류업무 정보화 및 정보제공 기반이 마련 되었으나, 주이용자가 학계, 연구기관, 물류기업 내 일부 인원으로 한정
  - 물류시스템의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 통합을 통해 서비스 제공체계를 단순화·효율화하고 물류분야 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물류정보 제공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 · 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지속적인 간담회 및 현장점검 실시, 공청회, 시연회 개최 등 현장의견 수렴 및 홍보, 민관협의체 구성하여 지자체 · 사업자 지원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침단물류단지 · 창고 설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수준, 대국민 물류서비스 향상과 물류비 절감 등 기대

◆ 성과목표 3. 공공성을 강화하고 국민중심 국토교통행정을 구현한다.

1

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공공기관 공공성 강화

다소 우수

(1) 평가결과

□ 주요성과

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

- (실태조사) 산하 공공기관의 직접고용 비정규직(기간제), 간접고용 비정규직(파견·용역)에 대한 전수 조사를 완료
- (계획 수립) 모든 기관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을 완료하였으며, '22년까지 정규직 전환 계획(로드맵)을 마련
- (전환 추진) 기간제는 '17년에 모든 공공기관(23개)이 전환 결정을 완료(3,063명), 파견·용역 근로자도 '17년에 계약이 만료되는 근로자 중 1,859명을 전환하기로 결정하는 등 선도적으로 정규직 전환 추진 중

② 경영평가 위원 자문, 기타공공기관 담당자와의 논의를 통해 '17년도 기타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방안을 마련

③ 대기업 위주의 공공기관 구내식당 계약 관행, 채용비리, 특정 성향의 단체에 집중된 광고비 집행 등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 모색

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규직 전환 결정은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으나, 세부적인 전환 내용(처우, 전환방식 등)의 합의\*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전환이 결정된 근로자의 실제적인 전환 임용은 '18.2월까지 완료할 예정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19.8	2018년도 기타 공고의관 경영실적 평가방안 마련 일정 지연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일자리 TF 및 자문단을 통해 애로사항 수렴, 장관 주재 워크숍 등을 통해 공감대 형성 노력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여 사회 양극화 완화, 비정규직 고용관행 개선에 선도적인 역할 수행
3-3. 정책만족도		4.35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토지수용 실태조사) 공익사업 유형에 따른 공용수용 빈도, 토지 수용·협의 취득 비율 등 토지수용 관련 실태 일제조사(‘17.8~10)

\* 국가, 지자체 등 총 67곳의 최근 5년간 공익사업 3,822개 현황 조사

- (토지수용권 부여기준) 새로운 유형의 공익사업에 대한 토지수용 규정 신설 여부에 대한 심사 기준(안) 마련(‘17.9)

\* ① 법령상 전제, ② 사업자의 의사와 능력, ③ 입법목적 부합성, ④ 공익 우월성, ⑤사업 계획의 합리성, ⑥ 수용 필요성, ⑦ 공익 지속성

- (중장기 방안) 이해관계자 의견수렴과 실태조사 현황 분석 등을 통해 토지수용규정 합리화를 위한 중장기 방안 연구 완료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토지 수용 분쟁에 따른 사회적 비용 감소를 위해 협의에 의한 사업부지 확보를 높일 방안도 모색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간담회, 관계부처 회의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, 토지수용 대상 사업의 합리적 조정 유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개발 사업을 많이 시행하는 국토부 내 관계부서에 대하여 사업의 시급성·공익성이 낮은 토지수용 규정 개선을 권고하여 국민의 사유재산권 보호 도모
3-3. 정책만족도		4.29

## (1) 평가결과

### □ 주요성과

- 국토교통분야 KS 운영을 위한 규정·지침\* 제정 고시('17.4)
  - \* 국토교통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
  - \*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
  - \* 국토교통분야 국내 ISO 간사기관 운영 지침
  - \* 국토교통분야 KS 인증기관 및 제품인증 등에 관한 지침
-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관리를 위한 매뉴얼\* 제정('17.11)
  - \* 국토교통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 운영 매뉴얼(내부방침)
- 표준개발협력기관(COSD) 지정 고시 및 지원사업 선정
  - 수자원 : 한국수자원공사, 한국건설기술연구원 COSD 지정('17.9)
  - 공간정보 : 한국국토정보공사 COSD 지정('17.6) 및 "2017년도 표준 개발협력기관 지원사업(공간정보분야)" 수행
- 기술기준과 표준간 부합화 대상 선정('17.12)
  - 우리부 건설기준 내 인용된 KS의 통합·대체·폐지 여부 전수조사
  - 건설기준 별 관련단체 검토를 통한 건설기준 개정(안) 마련

#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국토교통 기술심의회와 각 분야별 전문위원회 간의 표준 정비 현황 공유를 위한 제도 마련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보통	유관기관 의견수렴, 기술표준원 자문 등 정책현장 의견수렴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보통	우리부 소관 건설기준 코드 내 인용된 KS의 통합·대체·폐지 등의 여부를 전수 조사하여 즉시 반영 가능한 건설기준 코드 개정(안) 약 175건 마련
3-3. 정책만족도		4.29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우호적 분위기 조성) 새 정부 출범 후 8.2 대책 등 주요정책의 효과적인 홍보와 포항지진 등 긴급현안에 대한 안정적 리스크 관리 등으로 인하여 국토부 업무전반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우세
- (對국민 소통채널 확대) 국민들의 수요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여론조사·온라인 정책제안 등 소통채널을 전년에 비해 2배 확대
- (對언론 홍보) 정책 발표 시 언론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감안하여, 방송출연·간담회 등을 활용한 홍보와 함께, 출입기자·언론사 데스크 등과의 적극적인 스킨십을 통해 긍정기사 유도
- (온라인 홍보) 국정과제인 '서민주거 안정', '교통 공공성 강화' 등 정책추진 소식을 1천5백만여명에게 확산, 정책 인지도·관심도 제고
- (홍보 역량 강화) 체계적인 홍보 전략 마련을 위해 홍보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회의를 운영(2017년 총 6회 실시)
  - 또한, 국토부 전 직원 홍보역량 강화를 위해 맞춤형 홍보교육도 실시하고 수시로 홍보 MVP 선발, 경진대회 등을 통해 홍보 품질제고 유도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SNS 등 발달로 국민들이 선호하는 콘텐츠의 트렌드가 급격히 변화하고 그 수준도 높아지고 있어, 국민들의 수요와 트렌드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대국민 소통채널 발굴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여론조사(6회), SNS 의견수렴 채널('국토부에 바란다' 등), 빅데이터 분석(2회) 등을 활용하여 국민의견수렴을 확대하고, 홈페이지 열린장관실, 국민제안, 여론광장 등을 통해 직접소통 추진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8.2대책을 모멘텀으로 주거복지로드맵, 명절 통행료 인하 등에 대해 집중 홍보를 통해 우리부에 대한 긍정 평가 유도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부정부패 없는 투명하고 청렴한 국토교통부를 만들기 위해 감사관이 찾아가는 현장간담회 및 청렴교육, 청렴이행 진단의 날 운영, 맞춤형 청렴교육 등 실질적인 청렴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 지속(17.2월 청렴도 제고방안 수립)
  - 부패취약업무(인·허가 등) 담당자 및 선배 공사관리관(경력 10년 이상, 직무별) 대상 청렴교육 및 '청렴 Remind 교육',
  - 청렴리더(3.14, 34명) 및 청렴지킴이 교육(9.26, 47명), 공직생애주기별 과정 및 리더십 과정 청렴교육 확대 등 맞춤형 교육 강화
- 청렴음부즈만, 청렴자문위원회 등을 통해 건의사항 수렴 및 과제 발굴하고 관행개선위원회에서 개선과제 선정(17.6월 개최, 12월 개최 예정)
- 26개 기관 종합감사, 10개 취약분야 성과·특정감사, 4개 지자체에 대한 정부합동감사, 연말연시, 휴가철, 명절, VIP 해외순방 등 취약시기 특별감찰활동 실시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관행적·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부패행위 척결을 위한 직원의식 개혁 등 자정기능을 강화하고 민관협업 확대
  - 현장중심의 맞춤형 청렴교육 등 직원 의식개혁을 위한 활동을 확대하고, 청렴지킴이 활동 내실화로 조직내 자정 기능 강화

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소속기관 청렴리더 간담회, 청렴도 제고대책 보고회 등을 통해 청렴정책 개선방향 및 제도개선(안) 마련, 제도정비, 청렴교육 등 변화하는 환경에 선제적 대응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깨끗하고 청렴한 부처를 만들기 위해 강도 높은 청렴대책을 추진하는 한편 적극적인 감사·감찰을 실시하여 조직내·외 청렴문화가 확산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중점법안에 대한 간부급 대국회 협의, 장차관님 심층보고, 쟁점 사전해소 노력 등을 통해 법안 상정건수와 처리건수를 대폭 제고
  - '17년 국토부 중점 추진법안 총 106건 중 106건이 상임위에 상정되는 성과를 달성하였으며, 법안소위를 거쳐 이중 100건이 상임위 통과
  - 상임위 통과 100건 법안 중 새만금법 등 7건을 제외한 93건의 법안은 법사위, 본회의를 통과, 국정과제\* 및 주요정책의 추진동력 확보
- 상시적인 법안국회 대응 중에도 법률 및 하위법령 제·개정 시 총 427건에 대한 체계자구 등 법령 사전검토를 차질없이 수행하여 국토부 부내의 법령입안을 적극적으로 지원
  - 사전검토를 통해 국회심의 및 규제·법제처심사 시 법률적 분쟁 사전해소 및 입법수요자가 이해하기 쉬운 법체계 마련
- 특히, 올해부터 신규로 법제처 법안심사 담당자(우리부 심사 담당)와 함께 국토부내 법령 입안자 대상 법안설명회를 개최(2회)하여 법안입안 노하우와 유의사항 등을 공유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법안설명회 개최 시 기초교육이 필요한 직원과 심화교육이 필요한 직원과의 수준 차이가 있었으므로, 향후 설명회 개최 시에는 기초-심화단계로 구분하여 수준별 법제 교육 실시 필요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타부처 반대가 예상되는 법안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를 철저히 수행하고 이견사항을 사전적으로 해소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(경제활력 제고) 부동산서비스업, 해외건설 촉진, 신산업(드론, 스마트시티) 등의 경제활성화 법안 처리 (민생) 부동산 대책, 소비자 보호 강화, 규제완화 등 법안 처리 (안전 강화) 위험물 운송 안전관리, 사업용 자동차 안전대책 철도·항공안전 강화 법안 등 처리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재정 조기집행) 우리부 소관 SOC 예산의 집행목표 60.5% 대비 62.1% 집행하여 집행목표 1.6% 초과 달성

\* 총 187,688억원, 목표액 113,552억원(60.5%), 집행액 116,547억원(62.1%)

- 우리부 소관 전체예산 연말 집행목표 95.5% 대비 96.6%를 집행하여 1.1% 초과 달성\* 전망

\* 재정집행 점검회의(12.20) 자료, '17회계 종료 후(1.15일경) 최종 실적 확인 가능

- (집행관리 강화) 1차관 주재 비상 재정집행점검단\*을 구성하여 주요 사업 관리 강화 및 특별관리 대상 추진 상황 점검 추진

\* (단장) 1차관, (단원) 사업부서 정책관, 공공기관 부단체장(구성: 1월, 운영: 매월 1회)

- (인센티브 부여) 상반기 집행 우수기관(실국, 공공기관, 지방청)에 대한 인센티브(업추비 추가, 장관표창) 부여

\* 장관표창 : 10명(본부 3명, 지방국토청 3명, 공공기관 3명, 우수사례 2명)

\* 업추비(지방국토청) : 3백만원(최우수 2백만원, 우수 1백만원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정부집행 실적 목표는 달성하였고, 매년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나 출연·보조사업 등 간접사업의 실집행 관리에는 한계

- 재정집행에 따른 효과를 국민이 체감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등의 집행기관의 실집행 실적이 중요하므로 실집행 관리 강화 필요

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A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현장조사를 통해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 청취, 추경사업 집행관리 철저 및 불용최소화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예산 조기집행, 추경 등을 통해 경제활성화에 기여 우리경제는 수출호조, 추경집행 효과 등에 따라 연말 3%이상의 경제성장률로 견실한 회복세 전망

## (1) 평가결과

## □ 주요성과

- (리콜제도 개선) 리콜통지 방법으로 문자발송을 추가하고, 교통안전공단이 리콜통지업무를 대행하도록 의무화(시행규칙 개정, 7.18)
  - 결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제작사의 자료제출 방법 및 기한 등을 규정하고, 자료제출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(시행규칙 개정, 7.18)
- (허위연비 보상) 보상금액 산정·수령방법 등이 포함된 '경제적 보상계획'을 소비자에게 통지토록 의무화(시행규칙 개정안 규제심사중)
  - 국내·외 연비, 출력 과다표시에 대한 보상사례 분석, 적절한 보상 방안 도출 등을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(4.27~10.27)하였으며, 보상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(11월)
- (한국형 레몬법\* 도입) 수 차례 수리에도 불구하고 결함·하자가 반복되는 경우, 중재\*\* (仲裁)를 통해 교환·환불하는 제도 도입
  - 교환·환불의 대상, 요건, 중재 절차 및 효과 등 하나의 완결된 제도를 별도의 장으로 구성한 자동차관리법 개정 공포(10.24)

## □ 개선·보완 필요사항

- (리콜제도 개선) 제작사가 제출하는 자료가 증가(100배 이상)하면서, 방대한 자료를 전문적·과학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조사인력 필요
- (한국형 레몬법 도입) 자동차안전·하자심의위원회의 안정적인 사무처리를 위한 사무국 필수 조직(인력) 및 예산 확보가 관건

## (2) 평가지표별 평가결과

평가지표	평가결과	평정근거 및 제언
1. 과제 난이도	S	이해관계자의 대립정도와 정책개선 및 목표치의 적극적 설정 정도가 매우 높음
2-1. 계획이행의 충실성	20	당초 추진계획상의 일정 모두 완료
2-2. 행정여건·상황변화에 대한 대응성	우수	제작사의 강한 반대에도 지속적인 협의와 의견 수렴, 국회설득을 통해 관련 법안 통과
3-1. 성과지표 달성도	20	당초 성과지표의 목표 모두 달성
3-2. 정책효과 발생정도	우수	한국형 레몬법 도입, 리콜제도 개선, 허위연비 보상 등으로 자동차 소비자 권익을 획기적으로 개선

#### 4.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

관리과제 번호	관리과제별 개선보완 필요사항	조치계획(조치시한)
Ⅲ-1-④	○ 자율주행 등 연구용역 추진계획 수립(3월)	○ 추가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추진계획 수립 ('17.4.11)
Ⅲ-3-⑤	○ 기존선 고속화를 위한 연구용역 (9월)	○ 추가 보완사항 연구를 위해 용역기간 연장 하여 '18년 용역 준공 예정('18.7.17)
Ⅳ-1-⑧	○ 공간정보구축법 개정안 입법예고 (8월)	○ 타법개정과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부득이 하게 의원입법 추진('17.9.15) ○ 공간정보구축법 개정 예정('18.1분기)
Ⅳ-3-①	○ 범부처 및 대민분야 공간정보 활용 추진	○ 국가 차원의 기초데이터 활용 기반 조성 ('18.하반기)
Ⅳ-3-③	○ 창업지원 보육시설 지원현황 점검 및 개선(11월)	○ 위탁기관 행정처리 문제로 1개월 지연 처리('17.12월 완료)